



주간통일정세 2011-24(2011.06.06~06.12)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1-24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 北노동당 "북중관계 代이어 강화"(6/6, 조선중앙통신)

- 북한 노동당은 6일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북중관계를 대를 이어 강화하기로 결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중앙통신은 "정치국 회의는 두 나라(북중) 영도자 사이에 합의된 문제들을 각 분야에 걸쳐 원만히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할 데 대해 지적했다"며 "조중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50돌이 되는 올해에 조중친선의 특수성을 다시 한 번 힘있게 과시할 데 대해 강조했다"고 밝힘.
- 통신은 "정치국 회의는 김정일 동지의 이번 중국 방문 결과에 열렬한 찬동을 표시하고 앞으로 조중친선을 대를 이어 전면적으로 강화발전시킬 데 대한 결의를 표명했다"고 소개
- 특히 '대를 이은 북중친선'을 강조함으로써 후계자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까지 양국 관계를 공고히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임.
- 이날 회의에서는 "김정일 동지의 이번 중국 방문이 매우 적절한 시기에 진행됐으며 훌륭한 결실을 가져왔다"고 평가
- 회의에서는 또 홍석형 당 비서를 직무 조정을 이유로 해임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로 이동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음.

● "표적지는 특대범죄" 北 사흘째 공세(6/6, 연합뉴스; 조선중앙방송; 노동신문)

- 국내 일부 예비군 훈련장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북한 최고지도자의 사진을 사격 표적지로 사용한 것을 두고 북한이 연일 대남 비난과 위협을 쏟아내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북한은 '최고 존엄을 건드렸다'며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이 나온 지난 3일 이후 주민들까지 동원해 가며 총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뉴스는 전함.
-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이명박 역적패당과는 애당초 마주앉을 필요가 없으며 오직 총대로 결판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찾게 된 최종결론"이라고 거친 용어를 동원해 위협



- 중앙방송은 이날 오전 아나운서가 정치·경제 소식을 전하기에 앞서 이례적으로 '일터와 초소마다 이명박 괴뢰 역적패당을 단매에 처부술 불타는 열의를 안고 있다'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고 보도
- 노동신문은 '범죄자들을 즉시 처형하라'는 글에서 "특대형범죄를 저지른 괴뢰국방부 장관 김관진을 비롯한 군사불한당들은 즉시 처형돼야 한다"며 "이번 죄행에는 절대로 시효가 없으며 우리는 이명박 역적패당이 이번 중대사건의 책임을 지고 처형될 때까지 군사적 보복을 계단식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김진범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은 중앙통신과 인터뷰에서 "하늘 끝에 닿은 치솟는 분노를 안고 우리 군대와 인민은 역적패당에게 철추를 안길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며 "괴뢰 당국은 민족과 전세계 앞에 정식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함.
- 조선중앙통신은 '사격 표적지'와 관련해 이날 노동신문에 실린 논평과 글 3건을 잇달아 올렸고 이례적으로 별도의 인터뷰 기사를 내보냄.

● 김정일 訪中 이후 북중관계 변화기류(6/8, 연합뉴스; 민주조선)

-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따른 후속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어 시선을 끌고 있다며 연합뉴스가 보도
- 북한 노동당 정치국은 6일 1981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확대회의를 열고 방중 결과를 보고받고 '대(代) 이은 북중친선'을 결의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같은 날 정령을 통해 황금평과 위화도를 특구로 지정해 개발할 것이라고 발표
-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런 일련의 움직임이 1991년 10월 김일성 주석의 방중에 이어 노동당 정치국 회의가 개최되고 이어 라진경제자유지대 창설, 남북 비핵화공동선언 합의 등 새로운 조치가 쏟아졌던 상황과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
-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일련의 조치에 대해 그동안 주로 정치·외교적 협력에 머물렀던 북중관계가 경제협력을 통해 호혜적 관계로 진화하는 것이란 견해를 내놓고 있다며 뉴스는 전함.
- 특히 최근의 북중 간 경제협력을 보면 중국의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 부분으로 그동안 북중 경제협력은 주로 중국의 지방정부나 영세기업의 대북진출을 통해 이뤄졌으나 김 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및 민간기업을 이끌고 경제 협력에 앞장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음.
- 북한도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열쇠를 북중관계에서 찾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은 지난 5일 '조중친선의 강화발전을 추동한 불멸의 대장정'이란 제목의 논설에서 북중관계를 강조했고, 평양방송



은 7일 "김정일 동지의 역사적인 중국방문은 조중친선의 훌륭한 전통과 공고성에 대한 힘 있는 과시"라고 평가

● 北, 이대통령 현충일 추념사 비난(6/8, 우리민족끼리)

- 북한은 8일 이명박 대통령이 이틀 전 현충일 추념사에서 "인내심을 갖고 진지하고 일관된 노력을 계속 하겠다"며 대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데 대해 '말장난' '맥 빠진 궤변' 등으로 혹평
- 대남 인터넷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상투적 궤변만을 되풀이한 현충일 추념사란 논평을 통해 "리명박 역도가 그 누구의 '도발'이니 '안보력량강화'니 하는 타령을 또다시 되풀이한 것"이라고 주장
- 이어 "올해의 '추념사'에는 자멸의 길을 달려온 리명박 패당이 그 참혹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비참한 처지와 거기에서 벗어나보려는 단말마적 발악상이 그대로 비껴(담겨)있다. '통일대비'니 '원칙고수'니 '진정성'이니 하는 대북정책은 더는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폐품에 불과하다"고 비난
- 논평은 또 "안보' 소동의 도수를 한층 높여 사복 입은 국무총리를 최전방 백령도와 연평도에까지 보내 색다른 '안보' 광대극을 연출하게 하고 우리의 최고 존엄에 엄중히 도전하는 특대형의 도발적 망동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몰아붙임.

● 北 "남북대화 논의할 여지없어"(6/8, 노동신문)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논평원의 글을 통해 남북 간의 대화를 논의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힘.
- 노동신문은 일반적인 대남·대외정책에 관한 입장 표명을 대부분 논평원 개인의 이름으로 하지만 주요 사안에 한해선 드물게 '논평원의 글'이라고 밝힘.
- 이 신문은 이날 '6·15의 도도한 흐름은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명박 패당이 감히 최고위급 대화까지 우롱한 오늘, 이제 북남 사이에 무슨 대화를 더 논의할 여지가 있겠느냐"고 반문
- 논평원의 글은 "북남대화가 시작돼 40년, 쌍방 사이에 공식, 비공식 대화와 비밀접촉이 수많이 이뤄지고 특사도 여러 차례 오고갔지만 이명박 패당처럼 불순한 흥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존엄과 성의를 모독하며 모략과 대결책동에 광분한 반통일 집단은 없다"고 비난
- 일부 예비군 훈련장에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의 사진을 사격 표적지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건드리는 표적까지 만들어 놓고 총탄을 쏘아대는 특대형 도발을 감행한 것은 북남관계 파탄책동의 최절정"이라고 주장
- 이어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은 역적패당 따위가 휘방을 논다고 그



의의와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오늘의 현실은 6·15의 전취물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교훈과 6·15의 위업을 기어이 이어나가야 한다는 의지와 각오를 몇 배나 더해주고 있다"고 덧붙임.

● 北 "비밀접촉 전과정 녹음기록 공개할 수도"(6/9,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남북 간 비밀접촉에 참여했던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표는 9일 비밀접촉에 관한 우리 정부의 해명을 반박하면서 접촉 당시의 녹음기록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밝힘.
- 국방위 정책국 대표는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을 통해 "(김태효, 김천식, 홍창화) 모두가 끝끝내 진실 밝히기를 거부하고 동족기만과 모략날조에 매달린다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접촉 전 과정에 대한 녹음기록을 만천하에 공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함.
- 정책국 대표는 이번 접촉이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우리 정부의 해명에 "김천식은 이번 비밀접촉은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와 인준에 의해 마련됐다면서 그 의미를 부각시켰다"며 "통일부 장관 현인택이 직접 접촉의 전 과정을 주관하고 있으며 청와대에도 그가 단독선을 통해 상황보고를 하고 있다고 했다"고 주장
- 또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 절충안을 논의하지 않았다는 우리 측 해명에 대해서도 "그들은 북측에서 보면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보면 사과로 간주되는 절충안이라도 내놓자고 빌붙었다"며 "그것도 통하지 않게 되자 나중에는 최소한 유감이라도 표시해주면 그것을 사과로 받아들이고 지금까지의 대결정책도 철회할 것이고 정상회담도 빨리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고 반박
- 그는 정상회담 일정을 제안한 적이 없다는 우리 측 설명에 대해서도 "김태효는 현 당국은 시간이 매우 급하다면서 대통령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했다는 일정계획이라는 것을 내놓았다"며 "말레이시아에서 비밀접촉을 한 번 더 가지고 뒤따라 장관급회담을 한 후 6월에 판문점에서, 8월에는 평양에서, 다음해 3월에는 서울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진행되는 기간에 정상회담을 연속 갖자는 시간표였다"고 맞받음.
- 돈봉투와 관련해서는 "접촉이 결렬상태에 이르게 되자 김태효의 지시에 따라 홍창화가 트렁크에서 돈봉투를 꺼내들자 김태효는 그것을 우리 손에 쥐어주려고 했다"며 "우리가 즉시 처던지자 황급히 돈봉투를 걷어놓고 우리 대표들에게 작별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주장
- 돈봉투가 숙식비용이었다는 우리 측 해명에는 "우리 대사관에서 숙식과 운수수단을 보장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 그들이 우리 대사관에 체류비를 섬겨바치려고 돈봉투를 마련했겠느냐"고 반문



● **中共산당 조직부장 방북(6/10, 조선중앙통신)**

- 리위안차오(李源潮) 중앙조직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대표단이 10일 북한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중앙통신은 리 부장의 방북 일정과 목적 등은 언급하지 않음.
- 대표단에는 왕자루이(王家瑞) 대외연락부장, 쑨정차이(孫政才) 지린성 당서기, 리시(李希) 상하이시당위원회 조직부장, 스타이핑(石泰峰) 장쑤성당위원회 조직부장, 양이앤이(楊燕怡) 당중앙 대외연락부장조리 등이 포함

● **北·中 평양서 전략대화(6/10, 조선중앙통신)**

- 북한 노동당과 중국 공산당은 10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전략대화'를 갖고 양국 친선협조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중앙통신은 "대화에서 쌍방은 자기 당 활동정형을 통보하고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해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논의내용은 언급하지 않음.
- 북측 양측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이후 황금평·위화도 특구와 나선 특구 착공식을 하는 등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날 대화에서는 정치·경제·외교 등 여러 방면에서 협조강화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임.
- 중국측에서는 이날 방북한 리위안차오(李源潮) 공산당 조직부장, 왕자루이(王家瑞) 대외연락부장, 쑨정차이(孫政才) 지린성 당서기, 판리강(潘立剛) 당중앙 조직국장, 리시(李希) 상하이시 당위원회 조직부장, 스타이핑(石泰峰) 장쑤성 당위원회 조직부장, 양이앤이(楊燕怡) 당중앙 대외연락부장조리 등이 참석

● **北김정일, 군인가족 예술공연 관람(6/11,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함께 제2기 제4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전함.
- 이날 공연에는 군 제534부대와 제529부대, 제264부대, 제549부대 군인가족들이 참가했으며,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기남·최태복 당비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영일·김양건·박도춘·최룡해·태중수·김평해·문경덕 당비서,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김창섭 국가안전보위부 정치국장, 리명수 인민보안부장과 당 중앙군사위원인 김경옥·김명국·김원홍·윤정린, 현철해 국방위 국장 등 당·군 주요 인사들이 함께 관람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 공연을 관람한 김 위원장은 "선군시대에 나서는 중요한 사회정치적 문제들을 사상예술적으로 깊이 있게 해명했다"며 "군인가족예술활동은 우리 군대와 인민을 조국보위와 강성국가 건설위업 실현을 위한 추동력이 되고있다"고 강조

● 北김영남, 방북 中공산당 조직부장과 담화(6/1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리위안차오(李瀛翱) 조직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대표단을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중앙통신은 "리위안차오는 김정일 총비서 동지의 이번 중국방문이 성과적으로 진행됐고 두 나라 최고영도자들께서 친선협조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셨다고 말했다"면서 "그는 조선인민이 더 큰 성과를 이룩해 김일성 주석 탄생 100돌이 되는 2012년을 뜻 깊게 맞이 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밝힘.
- 중앙통신은 또 이날 중국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북한 김영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가 별도로 회담을 했다고 전함.
- 중앙통신은 "회담은 동지적이며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만 설명하고 회담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남북 비밀접촉 공개 등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어 주목
- 회담에는 북측에서 김성남·박근광 당 국제부 부부장 등이, 중국 측에서 공산당 대외연락부 관계자 등이 참석

■ 김정일 동향

- 김정일, 희천발전소 건설 지원자들에게 「감사」 전달(6/7, 중방)
- 김정일, 원군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북창화력발전소 종업원 등에 감사(6/12, 중방)

■ 기타 (대내 정치)

- 최영림(내각총리), 6.2~4 양강도내 경제사업 실태들 현지 了解(6/7, 중통·중방)
- 김영대(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6.7 베트남친선대표단과 담화(6/7, 중통)
- 김영남, 6.8 駐北 멕시코 대사('마르타 오르티스 데 로싸스') 신임장 접수 및 담화(6/8, 중통)
 - 박의춘 외무상도 6.8 新任 멕시코 대사와 담화
- 김영남, 6.12 중국 공산당 대표단과 담화(6/12, 중통·평방)



나. 경제

- **北최고인민회의, 황금평·위화도 개발 추인(6/6,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6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황금평과 위화도경제지대 개발계획을 추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를 내움에(추진함에) 대하여'란 제목의 정령을 통해 "전통적인 조중(朝中)친선을 더욱 강화하고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함.
 - 정령에는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에 북한의 주권이 행사되고 황금평지구부터 우선 개발한다는 내용 등이 담김.

- **"WFP 5월 대북식량지원 규모 오히려 줄어"(6/7, 자유아시아방송(RFA))**
 - 지난 4월 말 대북 긴급지원 계획을 밝힌 세계식량계획(WFP)의 5월 대북식량지원 규모가 곡물 확보 지연으로 당초 계획의 5% 수준에 머물렀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전함.
 - 방송에 따르면 WFP가 5월에 북한 주민에게 지원한 식량은 1천600t으로 새로운 긴급지원사업 계획상 한 달 지원량인 3만2천800t의 5% 수준으로 이는 긴급지원계획을 밝히기 이전인 4월의 2천300t보다도 적은 양임.
 - WFP는 긴급지원 계획 발표 당시 5~7월 춘궁기에 어린이와 임산부, 노인 등 350만 명에게 식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5월 한 달간 WFP 지원의 혜택을 본 북한 주민은 112만 명에 불과함.
 - 나나 스카우 WFP 북한담당 대변인은 "4월 말에 발표한 대북 긴급지원 사업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금을 새로운 지원사업 비용으로 전환하고 곡물을 구입하는 데 두 달 가량 걸린다"며 "7월 초가 돼야 북한에 곡물을 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WFP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니세프(UNICEF) 등은 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북한의 9개도, 40개 군을 방문해 실태조사를 벌인 뒤 600만 명이 식량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

- **북한의 대미수출 1위 품목은 '기념우표'(6/7, 자유아시아방송(RFA); 미국 의소리(VOA))**
 - 미국의 대북제재 속에 2000년대 들어 북한의 대미수출 1위 품목은 기념우표인 것으로 나타남.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 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를 인용해 2000년부터 2010년 사이 미국에 수입된 북한산 제품이 33만5천 달러(한화 3억6천만 원) 규모에 불과했고 그 중 절반이 우표였다고 7일 보도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지난해 미국에 수입된 유일한 북한산 제품이 기념우표로 8천300달러 어치였다고 전함.
 - RFA가 전한 CRS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표를 제외한 북한의 대미수출



- 품목은 여성용 의류 정도에 그침.
- 보고서는 지난 4월까지 북한과 경제협력에 나선 중국기업이 86개인데 이들 기업이 북한에서 생산한 부품과 원자재 등이 중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으로 수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 **美 "대북 지원식량 전용 가능성 여전히 우려"(6/7,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7일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이 이뤄질 경우 이 식량이 필요한 곳이 아닌 군부 등 다른 곳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식량지원 문제와 관련, "우리의 우려 중 하나는 지원식량이 전용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말함.
 - 이와 관련, 그는 "(북한의 식량사정) 평가가 식량지원 여부를 결정할 한 측면이며, 또 다른 측면은 최종용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보하느냐 여부"라고 밝힘.
 - 토너 부대변인은 이어 북한을 방문했던 미국의 평가조사팀이 귀국했다면서 아직 식량지원 여부와 관련한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힘.
- **"北 식량상황 예년 수준"(6/8, 자유아시아방송(RFA))**
- 대북지원 사업을 하는 유럽의 일부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북한의 식량상황을 예년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보도
 - RFA는 북한에서 농업지원 사업을 하는 익명의 유럽 민간단체 관계자의 언급을 인용해 "북한의 식량상황이 늘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올해 특별히 악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함.
 - 한편 유럽연합 인도지원사무국 관계자들이 북한 식량사정 평가를 위해 방북한 가운데 브람 브랜즈 유럽연합 유럽위원회 대외국장은 "원조가 진정으로 필요한 경우만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RFA는 전함.
 - 브랜즈 국장은 "지난봄 세계식량계획 평가단이 북한에 들어가 실태조사를 한 후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유럽연합은 몇몇 의문점이 남아 있어서 자체적으로 조사단을 파견한 것"이라고 부연
- **북·중 합작개발 황금평 대규모 착공식(6/8, 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이 합작 개발하는 압록강의 섬 황금평이 8일 대규모 착공식을 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착공식장 곳곳에 '조중 친선', '공동 개발' 등의 문구가 적힌 대형 애드벌룬 수십 개가 뜨고 착공식 2시간여 전부터 군악대 연주와 북한의 노래 '휘파람' 등이 흘러나와 분위기를 고조시킴.
 - 북·중은 이번에 착공식과 함께 황금평 임대 조건 등을 명시한 합작개발 협약도 체결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뉴스는 전함.
 - 양국은 이날 행사를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조중 공동개발 공동관



리대상 착공식'으로 명명, 황금평에 이어 위화도에 대한 공동 개발에도 나설 것임을 내비침.

- 이날 착공식을 대대적으로 연 것은 이런 의혹을 해소하고 합작개발에 대한 양국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과시함으로써 대내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려는 포석으로 보인다고 뉴스는 전함.

● 훈춘-라진 도로 보수공사 착공식 열린 듯(6/9, 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 벨트를 잇는 간선도로 역할을 하게 될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북한 라진항 구간 도로 보수공사 착공식이 9일 열린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연변 소식통들은 이날 "훈춘-라진 도로 보수공사 착공식에 참석할 북·중 고위 인사들이 오늘 오전 7시께 숙소인 엔지(延吉)의 영빈관을 떠나 훈춘 취안허(圈河)통상구를 거쳐 라선으로 향했다"며 "엔지에서 라선까지 3-4시간 소요되는 걸 고려하면 오전에 착공식을 마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이날 라선에서는 훈춘-라진 도로 보수공사 착공식과 함께 중국 기업이 라선특구에 투자한 공장 착공식도 열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훈춘-라진 도로 보수공사 착공식에 참석한 인사들은 하루 전인 8일 오전 황금평 공동개발 착공식에 참석한 뒤 단둥(丹東)에서 특별기편으로 엔지에 도착, 영빈관에서 하루를 머문 것으로 확인
- 중국은 두만강 유역 경제벨트인 '창지투(長吉圖, 창춘-지린-두만강) 개방 선도구'를 건설하고 훈춘-라진을 연결고리로 삼아 라선특구도 북한과 공동개발, 이 일대를 국제적인 물류 거점으로 삼겠다는 구상
- 황금평이 8일 착공식을 한 데 이어 훈춘-라진 도로 보수공사가 본격화 되면서 황금평과 라선특구를 큰 축으로 하는 북·중 경협 벨트 조성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北, 황금평·나선 착공식 확인... "전력 시급해결"(6/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9일 황금평·위화도 특구와 나선 특구에서 열린 착공식을 확인하고 북중 양국이 협력해 나선의 전력 문제를 시급히 해결키로 했다고 밝힘.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와 나선 경제무역지대의 착공식이 각각 8일과 9일에 열렸다고 확인
- 중앙통신에 따르면 두 착공식에는 북측에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리수용 합영투자위원회 위원장, 리만건 평안북도 책임비서, 림경만 나선시 책임비서, 최종건 평북도 인민위원장, 조정호 나선시 인민위원장 등이 참석
- 중국측에서는 천더밍(陳德銘) 상무부장과 왕민(王珉) 랴오닝성 당서기, 쑤정차이(孫政才) 지린성 당서기, 류홍차이(劉洪才) 주북 중국대사, 천정가오(陳政高) 랴오닝성장 등이 나옴.
- 나선 착공식에서 장 부위원장과 천 부장 등 연설자들은 "라선지대를 공



동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은 두 나라 당과 정부의 의지이고 인민들의 염원"이라고 언급했다고 중앙통신은 덧붙였다.

- 또한 황금평·위화도 착공식에서 연설자들은 "두 나라가 공동 개발하고 관리하는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가 조중친선의 새로운 상징으로 건설돼 두 나라의 더 큰 번영과 인민들의 행복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

● "北, 신의주특구 행정장관 중국인 희망"(6/10, 경제관찰보)

- 북한이 2002년 시도했다 실패한 신의주경제특구를 다시 추진 중이며 초대 행정장관으로 중국 기업인을 임명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짐.
- 경제관찰보는 9일 단둥 소식통을 인용해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최근 단둥을 비밀리에 방문해 홍콩의 다국적 투자회사인 신형지(新恒基)그룹의 가오징더(高敬德, 55) 이사장을 만났다고 보도
- 김영남 위원장은 가오 이사장을 만나 신의주 발전과 북한의 경제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신문은 전함.
- 이어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신형지그룹을 매우 중요시하면서 가오징더 이사장을 여러 차례 초청했다"며 "북한은 가오징더가 신의주특구의 행정장관을 맡기를 희망하고 있고 이미 중국 고위층으로부터 동의도 얻었다"고 전함.
- 아울러 이 신문은 8일 열린 황금평 개발 착공식 소식을 전하면서 북한이 50~100년간 토지를 임대해주는 대가로 원래 받기로 했던 5억 달러 대신 식량 또는 필요한 현물을 받기로 했다고 보도

● 유럽 구호단체, 대북 식량지원 지속(6/10, 미국의소리(VOA))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프랑스 구호단체인 '프리미어 위장스'가 7월 평안남도과 황해남도의 7개 학교 어린이 1천300명과 교직원 300명에게 쌀과 옥수수 등 두 달치 식량을 나눠주기로 했다고 보도
- VOA는 프랑스 정부가 또 다른 구호단체인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에도 15만 유로를 지원해 북한에서 양어장 사업을 하도록 했다고 밝힘.
- 이어 VOA는 익명을 요구한 프랑스 외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프랑스 정부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프랑스 정부가) 예년처럼 구호단체들에 30만 유로를 지원했다"고 전함.
- 독일의 민간 구호단체 '캅 아무나르'도 이달 중 200t이 넘는 쌀과 콩을 북한에 전달할 예정이며 추가 식량 전달과 방북 문제를 북한 당국과 협의 중

● 中훈춘, 라진 이어 자루비노 항로도 개통(6/12, 연합뉴스; 연변일보)

- 중국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이 북한 라진항에 이어 러시아 극동 자루비노항을 이용한 동해 항로도 개통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12일 연변일보에 따르면 훈춘에서 자루비노를 거쳐 동해 항로를 통해 부



- 산으로 이어지는 컨테이너 화물 운송 정기 항로가 지난 8일 처음 열림.
- 훈춘-자루비노-부산 항로는 매주 왕복 한 차례씩 컨테이너선이 이용하게 되며, 이 항로는 훈춘에서 62km 거리인 자루비노까지 철도와 도로 등 육로로 화물을 운반한 뒤 450해리 떨어진 부산까지 화물선을 이용해 운송하게 됨.
 - 3만급 화물선 정박이 가능한 자루비노항은 훈춘-부산 항로 개통에 이어 중국 동북에서 남방으로 운송되는 물동량도 증가할 것에 대비, 부두 확장을 통해 120만에 그치고 있는 연간 물동량 처리 능력을 1천만까지 늘릴 계획
 - 이미 중국이 부두 사용권을 확보한 북한 라진항의 경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훈춘의 동해 출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훈춘은 잇따른 동해 항로 개통으로 중국 동북지역의 대표적 물류 거점으로 부상

다. 군사

- "북, 지난주 서해로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6/7, 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의하면 북한이 지난주 서해상으로 KN-06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으로 확인
 - 정보당국의 한 소식통은 8일 "북한이 지난주 중반 평안북도 서해안에서 KN-06 단거리 미사일을 한 차례 발사했다"면서 "현재 개량 중인 KN-06 미사일을 시험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힘.
 - 북한은 최대 사거리 120km의 KN-01/02 지대지 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리고 정확도를 높인 KN-06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기 위해 작년부턴 시험 발사하는 것으로 당국은 파악
 - 소식통은 "이번 발사는 단거리 미사일을 개량하기 위한 시험 발사"라면서 "북한이 최근 남측 군부대가 김일성, 김정일 부자 사진을 표적으로 이용한 데 대해 군사적 보복을 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과는 무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함.

라. 사회·문화

- 北 "日 과거청산하고 백배천배 배상해야"(6/8, 노동신문; 민주조선)
 -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이 8일 나란히 과거사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며 일본을 압박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이날 '일본은 하루빨리 과거청산에 나서야 한다'는 개인필명의 논설에서 "일본의 과거범죄는 세대가 수십, 수백 번 바뀌어도 절대로 지워버릴 수 없는 특대형 반인륜적 죄악"이라며 "우리 인민은 일본의 과거죄악의 대가를 반드시 천백배로 받아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신문은 "오늘 국제사회에는 과거의 잘못에 대해 성근하게(성실하게) 반성하고 사죄, 배상함으로써 죄 많은 과거와 결별하려는 움직임이 적극



화되고 있다"며 "일본은 우리 인민의 반일감정과 의지를 똑바로 보고 하루빨리 과거청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

- 민주조선도 '반드시 결산돼야 할 일본의 인권유린범죄'라는 개인필명의 글을 통해 "지난 세기 일제가 수많은 조선사람을 강제연행, 납치해 노예 노동을 강요하고 학살한 그 포악성과 야만성은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사실이 이러함에도 일본은 과거범죄에 대해 사죄와 배상의 책임을 계속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
- 이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백년속적 일제의 죄악의 역사를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며 그 피 값을 백배, 천배로 기어이 받아내고야 말 것"이라고 함.

● "北 에이즈 양성반응 외국인 입국 제한"(6/8,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에이즈)에 걸린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를 제한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보도
- RFA는 유엔 에이즈계획(UNAIDS)이 에이즈 발견 30년에 맞춰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함.
- UNAIDS 산하 아시아에이즈위원회는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역에서 성매매와 마약 복용이 이뤄져 에이즈 발병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북한 지역 역시 에이즈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경고했다고 RFA는 덧붙였다.
- 2004년 북한의 주간 영자신문 '평양타임스'는 1989년부터 내외국인에 대한 검사를 벌인 결과 에이즈 양성반응을 보인 내국인은 한명도 없었고 외국인 27명은 출국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고 RFA는 전함.

● "농업용수 사용 많아 北도시들 물 부족"(6/8,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에서는 농업용수의 비중이 높아 평양과 청진 등 도시에서 쓸 물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추정
- 영국의 컨설팅회사인 메이플크로프트가 최근 발표한 '물부족 지수'에서 북한은 전체 평가대상국 186개국 가운데 75위로 중위권이지만 상대적으로 도시에서 사용할 물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전함.
- 이 회사 대변인은 RFA에 "북한의 농업용수 비율은 전체 사용량의 55%로 다른 나라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도시에서 사용할 물이 부족해 보인다"고 설명

● "올해 北 아리랑공연 축소...8월1일 개막"(6/9,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의 집단체조 공연인 '아리랑'이 8월1일 개막하지만 예년보다는 일정이 축소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전함.
- RFA는 과거 일주일에 6차례 열린 공연이 이번에는 4차례로 줄고 9월 30일까지였던 기간도 9월9일까지로 짧아졌다고 보도
- 방송은 북한이 강성대국 진입의 해로 설정해 둔 내년에 더 큰 규모의 공연을 하려고 이번 공연 일정을 단축한 것으로 해석



- 방송은 올해 아리랑 공연을 앞두고 미국과 영국, 중국 등지의 여행자들이 여행객 모집에 한창이라고 전함.

● **북한에선 男 폐암 女 유방암 최다발병(6/9,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癌)은 남성의 경우 폐암, 여성은 유방암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보도
- RFA는 9일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의 2008년도 자료를 인용해 당시 북한에 새로 발생한 암 환자가 3만7천명으로 이 중 남성이 1만4천여명, 여성이 2만2천여 명이라고 보도
- RFA에 따르면 북한의 남성 암환자 중에는 폐암 환자가 약 4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성 암환자의 경우 유방암 발병률이 가장 높음.
- 남성 암환자의 경우 폐암 다음으로 위암과 간암, 대장·직장암 순으로 발병했으며, 여성은 유방암에 이어 폐암, 대장·직장암, 위암, 간암, 자궁암 순
- 국제암연구소 대변인은 RFA에 "2008년 북한의 암환자 3만7천여 명 가운데 약 2만7천명이 사망했다"고 밝힘.
- RFA는 국제암연구소 통계를 근거로 북한의 암 발병이 인구 10만 명당 130명으로 세계 평균인 181명보다 적고 262명인 한국에 비해 절반 수준이지만 2020년에는 4만6천여 명, 2030년에는 5만2천명 이상으로 암 환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함.

● **"아동위해 이혼 안돼"..北아동·여성권리법 눈길(6/12, 연합뉴스)**

- '부모는 아동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이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 '부부간에 이혼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남성은 아내가 임신 중에 있거나 해산 후 1년 안에 있다면 이혼을 제기할 수 없다.' 등의 북한이 올 초 제정했다고 밝힌 아동권리보장법과 여성권리보장법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돼 관심을 끌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이들 법률은 단순히 조문 상으로만 보면 거의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아동과 여성의 권리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 전문가들은 법률제정이면에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따가운 눈총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 아니냐는 의혹
- 12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정령을 통해 '아동권리보장법'을 채택했으며, 역시 지난해 1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발표된 '여성권리보장법'은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 또 사회주의 경제건설 이바지를 위한 철도차량법과 위생문화적 생활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원림법, 해사소송관계법 등을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잇따라 제정
- 그러나 아동과 여성에 대한 권리 보장 등 법률로만 북한 사회를 보면 북한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는 광범위한 법률 체계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회는 수령 독재체제에 의해 움직이는 사회이기



때문

● 北 "북·미 관계 개선 기대"(6/12, 연합뉴스)

- 북·미간 '뉴욕채널'로 불리는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한 관계자는 11일 북한 태권도 시범단의 첫 시범공연이 열린 미국 매사추세츠주 로웰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이번 태권도 공연으로 북·미 관계가 좋아지기를 기대한다." 말함.
- 그는 북·미 관계 개선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정치를 떠나 이런 문화·체육 교류를 통해 인민들끼리 가슴과 가슴이 맞닿게 되면 (두 나라 관계에)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대답
- 북측 관계자의 이런 발언은 북한 태권도 대표단이 지난 2007년에 이어 3년8개월 만에 다시 미국을 방문해 공연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나온 것
- 특히 최근 로버트 킹 미국 대북인권 특사가 북한을 방문해 대북 식량 지원과 북한과 재미동포 간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을 논의했고 미 국무부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북한 태권도 대표단에게 비자를 발급한 것으로 알려져 북·미간 해빙무드가 조성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

2. 대외정세

가. 일반

● 게이츠 "美, 北 불안정하게 만들 생각 없다"(6/6, 연합뉴스)

- 미 국방부가 5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게이츠 장관은 지난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인 '상그릴라 대화'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미국은 북한의 정권교체에 관심이 없으며, 북한을 불안정하게 만드는데도 관심이 없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이어 "북한이 모든 다른 국가들이 준수하는 똑같은 국제 룰을 준수하도록 6자회담 관련국들이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함.
- 또한 "계속되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 잠재적인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가능성 및 계속되고 있는 핵무기 개발로 북한은 미국에 직접 위협이 되는 과정에 있다"고 거듭 밝힘.
- 그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 등을 거론하면서 "우리의 우려 중 하나는 또 다른 도발이 있을 경우 (발생할) 예측할 수 없는 긴장 고조 위험"이라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더욱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 이와 함께 그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북한의 도발이 "후계세습과 연계된 것이 아니기를 기대한다"면서 남북 간에 평화적인 방안으로 확산 문제를 포함한 이슈들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
- 한편 녹취록 전문 서비스사인 FNS가 5일 제공한 녹취록에 따르면 게이



츠 장관은 지난 2일 미국 공영라디오방송 NPR과의 인터뷰에서 "이란과 북한은 모두 핵무기들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이미 그것(핵무기)들을 갖고 있다"고 밝힌.

- 미국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미 당국자들은 공·사석에서 북한의 실질적인 핵능력과 관련,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언급을 종종 내놓고 있다며 뉴스는 전함.

● 北 반총장 연임 지지 "하지만 연설은.."(6/7,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6일 오전(현지시간) 반 총장이 재선 도전을 공식 발표하기 직전 유엔본부 식당에서 열린 반 총장과 유엔 내 아시아그룹 회원국 대사 53명과의 조찬 회동 자리에서 반기문 총장의 연임을 적극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
- 신 대사는 반 총장과 인사말을 나누는 자리에서 "우리는 총장님의 재선을 적극 지지합니다. 그러나 오늘 공개 지지 연설은 안할 생각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이 자리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가 전함.
- 북한 신 대사는 반 총장과 회원국 대표들의 발언을 진지하게 경청하면서 꼼꼼하게 발언 요지를 메모하기도 했으나 처음 반 총장에게 밝힌 대로 발언 신청은 하지 않았으며, 이를 두고 한 유엔 외교관은 최근 남북간의 불편한 관계를 반영한 것 아니냐고 나름 풀이

● 美하원도 대북제재 강화법안 추진(6/7, 연합뉴스)

- 미 하원 외교위원장인 일리애나 로스-레티넨(공화. 플로리다) 의원과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캘리포니아) 의원은 지난 3일 북한, 이란,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 개혁 및 현대화 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북한과 관련된 제재 대상과 조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법안은 이들 3개국에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품은 물론 재래식 군사 물품이나 기술을 제공하거나 판매한 기관·업체도 제재하도록 규정 및 이들 기관, 업체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 금융시스템 접근을 금지시키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에 레티넨 의원은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 개혁 및 현대화 법안은 불량 국가들이 다른 불량국가나 극단주의 그룹에 위험한 물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기존의 법을 더 강화해 줄 것"이라고 밝힌.

● "킹 특사, 北과 재미동포 이산상봉 논의"(6/8, 자유아시아방송(RFA))

- 로버트 킹 미국 대북인권특사가 지난달 방북했을 때 북한과 재미동포의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논의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보도
- RFA는 미국 국무부 고위관료의 언급을 인용해 "킹 특사가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을 비롯한 북한 당국자에게 인권 개선을 촉구했으며 여기에 이산가족과 관련한 문제도 포함됐다"고 전함.



- 이 관료는 "미국에 사는 한인 이산가족이 북한의 가족을 만나도록 미국 정부가 여러 노력을 하고 있으며 킹 특사의 주요 업무에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포함 된다"고 말함.
- RFA는 "미국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면서 북한과의 인권관련 대화 범위를 확대할 수 있지만 한국을 따돌리고 미국과 대화하려는 북한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전함.

● 파네타 "北, 美에 커지는 직접적 위협"(6/10, 연합뉴스)

- 리언 파네타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는 "북한은 미국 및 역내 동맹국과 국제사회에 커지는 직접적 위협(growing and direct threat)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파네타 지명자는 9일 열린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대규모 재래식 전력 및 탄도미사일과 우라늄농축 활동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은 북한의 이런 위협을 확인해 주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함.
- 특히 "북한의 미사일과 WMD 프로그램은 역내 동맹국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자 미국 자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WMD와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및 확산 활동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밝힘.
- 그는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및 WMD 기술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과 관련, 수상한 화물들을 신고 가는 선박과 항공기들에 대한 검색과 차단 등의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국방장관에 임명될 경우 확산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강화하고, 국제 파트너들과 WMD 관련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하겠다"고 답함.
- 파네타 지명자는 또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관련, "미국은 북한, 이란과 같은 곳에서 오는 제한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면서 "지상발사 중간궤도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향상시킴으로써 이 같은 대응체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힘.

● "日, 北에 9월까지 일본인 납북 재조사 요구"(6/10, 교도통신)

-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10일 오전 납치문제 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북한에 '9월까지 납치(일본인 납북) 피해자 재조사를 요구하라고 지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
- 총리는 "주권의 문제, 사람의 생명에 관련된 문제인 만큼 단호히 대처 하겠다"며 북한이 재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대북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짐.

● 美 "中에 대북 영향력 행사 요청"(6/11,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10일 남북관계 개선이 우선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한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를 요청했음을 시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레브리핑에서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 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중국, 한국 방문 결과와 관련, "우리는 필요한 다음조치는 남북 간의 진전된 대화라고 믿는다는 점을 줄곧 말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힘.
- 그는 "이런 측면에서 중국은 중요한 파트너"라면서 "그(캠벨)가 그들(중국)에게 이 과정을 진전시키기 위한 그들(중국)의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생각 한다"고 말함.
- 토너 부대변인은 또 북한과 중국이 최근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와 나선 경제무역지대의 착공식을 개최하는 등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은 채 "우리는 북한과의 거래에서 투명성과 극도의 조심성, 경계를 촉구 한다"고 밝힘.

나. 6자회담(북핵)

● 美 캠벨 방중..北문제 등 협의(6/7, 연합뉴스)

-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중국 외교 당국자들과 북한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6일 베이징을 방문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캠벨 차관보의 이번 방중은 북한의 일방적 남북대화 중단 선언으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기존의 '3단계 방안'의 틀이 흔들린 후 미국과 중국이 처음 만나 한반도 문제를 조율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
-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7일 정레브리핑에서 "캠벨 차관보가 6일 방문해 추이텐카이(崔天凱) 외교부 부부장과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를 각각 만나 양국관계와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힘.
- 아울러 캠벨 차관보는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 특별대표와의 회견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에 대한 사후 설명을 듣고 북한의 남북 비밀접촉 공개와 대화 중단 선언 이후 더욱 불투명해진 6자회담 재개 절차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뉴스는 전함.
- 이 자리에서 중국이 미국 측에 6자회담 참가국 사이에 공감대를 얻어온 '남북대화→북미대화→6자회담 재개'의 3단계 방안을 고수하며 북한에 대한 설득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을지, 아니면 첫 단추인 남북대화가 실현되기 어려워졌다는 현실적 판단 아래 이를 생략한 새 방안을 제시 했을 지가 관심사

● 위성락 베이징 도착.."3단계 접근 유효"(6/8, 연합뉴스)

- 한국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8일 남북대화, 북미대화, 6자회담으로 이어지는 '3단계 접근법'과 관련해 "우리가 그동안 제시하고 추진해 다섯 나라의 동의를 얻은 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남북대화 중단 선언과 관련해 "최근 북측으로부터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며 "그런 언급들은 6자회담 참가국들의 우려의 대상이 되



고 있다"고 지적

- 이어 "그런 상황 전개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6자회담 참가국 간 논의가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우선 중국과 논의를 하고 서울로 돌아가 미국, 러시아와 협의할 기회가 있다"고 덧붙임.
- 아울러 북한이 지난주 서해상으로 KN-06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좀 더 검토를 요하지만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라고 평가
- 위 본부장은 방중 이틀째인 9일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회담을 갖고 북한이 남한과의 대화 중단을 선언한 현 상황에서 '3단계 접근법'을 어떻게 운용할지 논의할 예정으로 중국 측에 북한이 다시 남북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설득하는 건설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커트 캠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중국 당국자 간 협의결과를 청취할 것으로 관측

● "영변 일대 건물 신축 등 공사 활발"(6/11, 연합뉴스)

- 북한 영변 핵시설 일대에 건물 신축·리노베이션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핵군축 싱크탱크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10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
- ISIS는 우리늄 농축공장과 북한이 경수로라고 주장하는 원자로 시설에 최근 관심이 집중돼 왔지만, 인공위성 사진 분석결과 이 외에도 영변에는 추가적인 건물 신축 또는 리노베이션 움직임이 지난 2년간 있었던 것으로 분석
- ISIS는 지난 2009년 4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과 영변 핵불능화 작업에 관여하던 미국 전문가팀이 철수한 뒤 이런 움직임이 벌어졌다고 전함.
- 또한 ISIS에 따르면 우선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의 북쪽에 있던 원자로 연료가공 건물로 사용됐던 건물의 경우 2009년 10월 촬영된 위성사진과 비교할 때 2010년 6월 촬영된 사진에서는 새로운 지붕이 발견
- 영변 핵시설 남쪽에 있는 새로운 우리늄농축 공장 주변에도 새로운 건물 신축 등의 움직임이 포착되었으며, ISIS는 이들 건물이 북한의 우리늄 농축프로그램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3. 대남정세

● 통일부 "北, 당분간 대남 초강경 입장 보일 것"(6/9, 연합뉴스)

- 통일부는 북한이 최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전면적 군사보복을 하겠다고 위협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당분간 대남 초강경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통일부는 9일 '주간 북한동향' 분석 자료를 통해 "북측의 반응은 남측에



대한 극렬한 불만을 표출함과 동시에 내부적 충성경쟁의 발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분석

- 이어 통일부는 북측은 김정일·김정은 표적지 사용 문제를 북한 체제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해 내부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으로 인식하고 사죄요구와 군사적 보복을 위협한 것으로 평가
- 북측이 남북 비밀접촉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 "남북관계 악화 책임을 전가하고, 우리 당국의 권위 실추 및 남남갈등을 조장해 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힘.
- 또한 북한의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발표와 관련해 통일부는 "불안정한 북한 정세와 대규모 자금 소요에 따른 사업 타당성 등으로 해외투자자와 관광객이 금강산 관광에 관심을 보일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내다봄.

● 통일부 "北일방주장..녹취록 있으면 밝혀라"(6/9, 연합뉴스)

- 통일부 당국자는 9일 북측의 남북 비밀접촉 녹취록 공개 위협에 대해 "북측의 일방적 주장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이 당국자는 "남북 간에 있었던 비공개 접촉의 내용과 성격에 대해서는 지난번 통일부 대변인 논평 이후 통일부 장관과 국무총리가 국회 답변 등을 통해 밝힌 바 있다"면서 "북측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함.
- 그는 녹취록 존재 여부와 관련해 "통일부 장관이 지난 2일 국회 답변과정에서 밝혔듯, 우리에게 녹취록은 없다"면서 "다만 녹음 등 북측이 주장하는 대로 기록이 존재한다면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지 말고 모든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밝혀라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함.
- 또한 북측의 폭로 의도에 대해 "정책결정이나 협의과정에서 북한 내부 사정이 복잡한 게 아닌가 추정 된다"고 분석하며 "지난 1일 발표 내용과 비교해보면 이번에는 우리 내부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특징"이라면서 "그때보다 우리 내부의 언론보도와 발언에 굉장히 민감한 듯 보이며 내부갈등을 유도해 정부를 어렵게 하거나 불신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곳곳에서 많이 보인다"고 지적

● 통일부 "北 사실왜곡 일방주장..유감"(6/10, 연합뉴스)

- 통일부는 10일 남북 비밀접촉에 관한 북측의 공개 위협과 관련해 "사실을 왜곡한 일방적 주장"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천해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은 어제 남북 비공개 접촉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는 일방적 내용을 주장했다"면서 "우리의 진위를 왜곡한 일방적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정부의 기존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함.
- 천 대변인은 "북한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북한은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갖고 대화에 나올 것을 다시 한 번



말 한다"고 전함.

- 그는 "정부는 이번 비공개 접촉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시인·사과를 받기 위한 접촉이었음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면서 북한이 언급한 '돈 봉투'와 관련해서는 "그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돈 봉투' 그런 내용은 없다"고 강조
- 또한 "이번 접촉이 북한이 먼저 제의해서 열리게 됐다는 경과에 대해서는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한 바 있다"고 말해 이번 접촉이 북측의 제의로 이뤄졌음을 거듭 확인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ASEM 외교장관회의 "남북대화 중요성 강조 표명"(6/7)

-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외교장관들은 "진지하고 건설적인 남북 대화의 중요성과 6자회담 재개 환경을 창출하는 구체적인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ASEM 46개 회원국 외교장관들은 6~7일(현지시각) 헝가리 부다페스트 인근 괴뉘뢰에서 열린 제10차 ASEM 외교장관회의를 마친 후 의장성명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음.
- 성명은 "외교장관들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동북아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 한다"며 "6자회담 틀 내에서 이뤄진 외교적 노력에 대한 지지를 다시 확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특히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핵무기와 기존 핵프로그램이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 방식으로 완전 폐기돼야 한다고 규정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들의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 위성락·우다웨이, 베이징서 북핵 논의(6/9)

- 한국과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이 9일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돼 6자회담 조기 재개를 위한 기존 해법인 '3단계 접근안'이 집중 논의됐음.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10시(한국시간 오전 11시)부터 베이징 외교부 청사에서 카운터파트인 중국의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회담을 갖고 북핵 6자회담 재개 방안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음.
- 위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측이 제안해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들이 사실상 동의했던 남북 간 비핵화 회담과 북미회담에 이은, 6자회담 재개라는 '3단계 접근안'의 유효성을 설명하고서 의장국인 중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 본부장은 아울러 중국 측에 최근 북한이 남북대화 중단 등의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음.
- 위 본부장은 하루 앞선 8일 베이징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3단계 접근안과 관련, "우리가 그동안 제시하고 추진해 다섯 나라의 동의를 얻은 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해 한중 회담에서 이를 쟁점화 할 것임을 예고했음.
- 그러나 우다웨이 특별대표가 기존의 3단계 접근안을 고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음. 북한이 최근 남한 측에 대화



중단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는 상황에서 남북대화 재개가 쉽지 않은 만큼 기존 3단계 접근안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유연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우다웨이 특별대표는 무엇보다 추가적인 한반도 상황악화 방지를 강조하면서 6자회담 조기 재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다웨이 특별대표는 아울러 지난 6일 베이징을 방문했던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의 회동 결과를 우리 측에 설명했다. 그러나 캠벨 차관보의 방중은 정례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미·중 양측 간 6자회담 대화 내용은 원론적인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지난달 30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한 정부와 상종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1일에도 남북 간 정상회담 비밀 접촉 사실을 공개하면서 대화 불가 의지를 공론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남북 비핵화 회담을 시작으로 한 3단계 접근안에 변화를 주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이날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조현동 북핵외교기확단장이 배석했음. 위 본부장은 회담을 마치고 이날 오후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귀국했음.

● 외교부 "비핵화 남북대화의 문 열려 있어"(6/9)

-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은 9일 "우리는 지난 1월 비핵화에 관한 남북 대화를 제의한 바 있고 이런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음. 조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대화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여망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음. 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남북한에 있기 때문에 대화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中 "대화·협상이 한반도 문제 해결방안"(6/9)

- 중국이 "대화과 협상이 한반도 문제의 유일한 해결방안"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음.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방중을 통한 한·중 회담에 결과에 대해 질문을 받고 이같이 언급했음.
- 홍 대변인은 "오늘 위 본부장과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회담했고, 그 자리에서 한반도 정세와 북핵 6자회담(재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확인했음. 그는 그러면서 "유관 각 측이 대화를 계속하면서 다자간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추동해야 하며, 이는 유관 각 측의 공통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이날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간 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음.



● <北 비밀접촉 2차 공세.. '진실게임' 의도>(6/9)

- 북한이 8일 만에 남북 비밀접촉 내용을 추가로 공개한 것은 이 문제를 '진실게임'으로 몰고 가 우리 정부를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노골적인 의도로 보임. 북측은 1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문답에 이어 9일 비밀접촉에 직접 참석했다는 국방위 정책국 대표의 문답 형식을 통해 자기 측 주장이 담긴 비밀접촉 내용을 재차 폭로했음.
- 북측의 1차 공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해명에 조목조목 반박했음. 이명박 대통령까지 직접 끌어들었음. 비밀접촉에 나섰던 김천식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이 "비밀접촉은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와 인준에 의해 마련됐다"고 말했다는 게 북한의 주장임. 이를 통해 남측이 정상회담 논의를 위해 먼저 접촉을 제안했다는 뉘앙스를 풍겼음.
- 그러나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북측이 먼저 접촉을 제안했다고 밝혔었음. 정부는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접촉이 아니라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기 위한 자리라고 해명했지만, 북측은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음.
- 우리 정부가 사과와 시인을 요구했다고 한데 대해서도 남측이 절충안을 제시했다고 재차 언급했음. "북측에서 보면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보면 사과로 간주되는 절충안이라도 내놓자고 남측이 빌붙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음.
- 정부는 정상회담과 관련한 구체적 일정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북측은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명백히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남측이 대통령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했다는 일정계획을 내놓았다"고 말했음. 말레이시아에서 비밀접촉을 한 번 더 갖고 장관급회담을 연후 6월 판문점, 8월 평양, 내년 3월 서울에서 핵안보정상회의 기간에 정상회담을 하자는 시간표를 제시했다는 것임.
- 돈통부에 대해서는 "김태효 비서관과 국가정보원 홍창화 국장에게 물어 보면 될 것"이라면서 "김태효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홍창화 국장이 트렁크에서 돈봉투를 꺼내 들자 김 비서관이 그것을 받아 우리 손에 쥐여 주려고 했다"고 주장했음. 이어 "우리가(북측) 즉시 쳐 던지자 김 비서관의 얼굴이 벌개져 안절부절못했으며, 홍 국장이 어색한 동작으로 트렁크에 황급히 돈봉투를 건어 넣었다"고 언급했음.
- 북측은 1차 공개 때와 마찬가지로 남측이 "우는소리를 했다", "비굴하게 놀아냈다" 등의 원색적인 표현으로 정부를 압박했음. 특히 주목되는 것은 북측이 녹취록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힌 대목임. 우리 정부는 녹취록이 없다고 밝혔었음.
- 북측은 "끝끝내 진실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동족 기만과 모략 날조에 매달린다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접촉과정에 대한 녹음기록을 만천하에 공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음. 녹취록이 존재한다면 이는 북측이 우리 대표단 몰래 했을 수 있음. 북측의 주장에 정부는 이미 1차 폭로 때 입장을 밝혔으며 공식적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임. 그러나 북



- 측이 공언대로 추가로 녹취록까지 공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이것이 현실화되면 남북 비밀접촉은 다시 한 번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음. 북측의 추가 공개는 1차 공개로 나름대로 '재미를 봤다'고 평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임. 1차 공개 이후 국회 공방 등을 통해 우리 정부가 난처한 입장에 처한 상황을 즐기는 셈임.
- '남북대화-북미대화-6자회담'으로 이어지는 3단계 안에서 남북대화를 건너뛰기 위한 전략적 포석도 깔렸다는 분석임. 비밀접촉이 남측의 태도로 결렬됐다면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는 한편 자신들도 할 만큼 했다는 주장을 미국과 중국에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특히 추가 공개를 통해 우리 정부를 더욱 궁지에 몰아넣고, 남남갈등을 부채질해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과 기조를 흔들려는 의도도 담겨 있음.
-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의 공개 배경에 대해 "북측 내부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 한다"면서 "우리 내부의 갈등을 조장하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켜 흔들려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음.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그동안 남한 정부의 해명과 북측이 실무접촉 대표들을 숙청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자극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런 식의 공방으로는 남북 모두가 패자가 되는 만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음.

● 캠벨 美차관보 "先 남북대화 지지"(6/10)

-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0일 북한이 최근 남북대화 중단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한국 정부의 대화재개 과정을 적극 지지 한다"면서 "중국에 대해 북한이 남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도록 설득하라고 촉구했다"고 밝혔음.
- 캠벨 차관보는 이날 낮 서울 도림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텝)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중국 당국자들은 최근 북한이 남북 비밀접촉 내용을 폭로하고 판을 깬데 대해 놀라고 있으며 남북 대화에 진전이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의 남북대화 중단 선언에도 불구하고 남북 비핵화 회담을 출발점으로 북미대화를 거쳐 6자회담을 재개하는 우리 정부의 3단계 접근방안을 계속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어서 주목됨.
- 캠벨 차관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근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남북 비밀접촉 폭로 계획을 중국에 얘기해주지 않은 것 같더라"면서 "중국과 미국, 한국은 북한 관련 접근법에서 여러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으며 비록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모두 남북관계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본 당국자들과 만나서도 남북 대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 그는 향후 정세운용 방향에 대해 "미국 정부는 한국과 이 문제에 대해 매우 긴밀하게 협의해오고 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말 하겠다"면서 "우리는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되는 것을 보기 바라며 한국 정부의 노력이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음. 그는 천안함·연



평도 사건 처리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품위 있는(Dignified) 대응을 매우 존경하고 지지 한다"면서 "우리는 전략적 대응기조를 설정하는데 있어 매우 긴밀하다"고 밝혔다.

- 캠벨 차관보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 인도네시아발(發) 항공기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예방하고 김재신 외교부 차관보와 회동했음. 오후에는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면담할 예정임.

● <한미중러 연쇄외교전..복잡해진 '6자방정식'>(6/10)

- 6자회담 재개 해법을 둘러싼 관련국들의 수싸움이 복잡해지고 있음. 북한의 남북대화 중단 선언 이후 남북→북미→6자회담 재개로 이어지는 3단계 재개안의 틀이 흔들리고 있는 흐름에서임.
- 아직은 남북대화가 첫 단추라는 인식이 6자회담 관련국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상황이 좀처럼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서 각국의 입장도 미묘하게 갈라지는 기류임.
- 일단 우리 정부는 3단계안 '다잡기'를 시도하고 있음. 북한을 남북대화의 장으로 끌어내 비핵화 진정성을 유도한다는 현행 압박기조를 유지하는 입장임. 북한이 남북 비밀접촉 내용까지 공개하며 '판 흔들기'를 꾀하는데 대해 순순히 말려들지 않겠다는 기세가 읽힘.
- 정부는 이에 따라 미·중·러를 상대로 한 연쇄접촉 과정에서 '현행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음. 위성락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의 방중과 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방한, 그리고 로그비노프 러시아 6자회담 차석대표의 방한이 그 계기임.
- 문제는 3단계안에 터 잡은 우리 정부의 대북 압박기조가 현 국면에서 힘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임. 북한이 남북대화를 공개적으로 거부한 마당에 계속 '남북부터'를 강조하는 3단계안을 고수하는 것이 과연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인해내는 '유효적절한 카드'냐 하는 물음에 봉착해있는 분위기임.
- 관건은 당초 우리 정부의 3단계안을 지지했던 미·중이 어떤 전략적 입장을 취하느냐 임. 양국은 지난 6일 캠벨 차관보의 방중을 계기로 앞으로의 정세운용 방향에 대한 G2(주요 2개국) 차원의 의견조율을 시도했음. 이 조율은 구체적인 접점을 찾기보다는 현 상황을 평가하는 성격이 강하지만 대화 재개와 한반도 상황안정이라는 공동의 전략적 목표 아래 높은 수준의 '전략대화'가 오고 갔을 것으로 추정됨.
- 주목할 대목은 3단계 안에 대한 미·중의 지지도가 전 같지 않다는 점임. 당장 중국의 태도가 모호해 보임. 겉으로는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전략적으로 궤도수정을 꾀하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관측임.
- 이는 앞으로 상황 추이에 따라 판을 바꿔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회동을 제안하거나 북·미 대화를 촉구하는 식으로 중국의 태도가 변화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외



- 교장관 회의 기간인 7일 개최된 김성환 외교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의 회동에서도 이 같은 입장차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은 일단 우리 정부와 보조를 같이하고 있음. 10일 오전 방한한 캠벨 차관보는 우리 정부 고위당국자들과의 면담에서 남북대화의 중요성과 비핵화와 관련한 북한의 진정한 태도변화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식량지원도 일단 '속도'를 조절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음. 그러나 현 상황이 계속 방치될 경우 오바마 행정부로서도 계산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 보임. 한미동맹은 움직일 수 없는 대(對) 동북아 외교의 기축이지만 상황이 다시 악화될 경우 대북 정책실패 논란이 불거지며 집권 2기를 겨냥한 오바마 행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함.
 - 러시아로서는 현 상황을 관망하면서 남과 북 사이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전략적 이해를 극대화하려는 포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는 일단 현행 압박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일정하게 전략적 유연성을 꾀해야 하는 '압박'에 놓이게 됐음. 북한의 통상적 행동패턴으로 볼 때 이대로 가다가는 상황이 다시 악화될 개연성이 크고 자칫 파국이 현실화될 경우 그 책임이 남측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는 탓임.
 - 북한의 진정한 태도변화를 요구하는 우리 정부의 '진의'와는 달리 북한의 선전공세 속에서 마치 남측이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대외적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분석임.
 - 더욱 큰 문제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주도해온 북핵 논의의 이니셔티브가 미·중 주도로 넘어가면서 자칫 외교적으로 수세국면에 몰릴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임.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정부로서는 현재 비핵화 문제를 남북대화에서 다룬다는 현행 대북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천안함·연평도 문제를 비핵화 트랙과 일정하게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어 보임.
 - 또 남북대화를 통해 비핵화 문제가 논의될 경우 '다음 단계'인 북미대화로 가기 위한 전제조건들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임. 이에 따라 남북을 중심으로 관련국들이 서로의 입장과 태도변화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일종의 '탐색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영변 일대 건물 신축 등 공사 활발"(6/11)

- 북한 영변 핵시설 일대에 건물 신축·리노베이션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핵군축 싱크탱크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10일 밝혔음. ISIS는 우리늄 농축공장과 북한이 경수로라고 주장하는 원자로 시설에 최근 관심이 집중돼 왔지만, 인공위성 사진 분석결과 이 외에도 영변에는 추가적인 건물 신축 또는 리노베이션 움직임이 지난 2년간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음.
- ISIS는 지난 2009년 4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과 영변 핵불능화 작업에 관여하던 미국 전문가팀이 철수한 뒤 이런 움직임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ISIS는 이들 공사가 우리늄 농축이나 우리늄



전환, 연료봉 가공 등과 연계됐을 수 있다면서 북한은 이들 새로운 건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ISIS에 따르면 우선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의 북쪽에 있던 원자로 연료 가공 건물로 사용됐던 건물의 경우 2009년 10월 촬영된 위성사진과 비교할 때 2010년 6월 촬영된 사진에서는 새로운 지붕이 발견됐다. 이와 함께 영변 핵시설 남쪽에 있는 새로운 우라늄농축 공장 주변에도 새로운 건물 신축 등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 구체적으로 우라늄농축 공장 옆 건물의 지붕이 새로 만들어졌으며, 올 3월 촬영된 인공위성 사진에는 우라늄농축 공장 동남쪽에 새로운 2개의 건물이 신축됐고, 이와 별도로 2개의 건물 신축을 위한 기초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도 촬영됐다. ISIS는 이들 건물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美 "中에 대북 영향력 행사 요청"(6/11)

- 미국 국무부는 10일 남북관계 개선이 우선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한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를 요청했음을 시사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레브리핑에서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중국, 한국 방문 결과와 관련, "우리는 필요한 다음조치는 남북 간의 진전된 대화라고 믿는다는 점을 줄곧 말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그는 "이런 측면에서 중국은 중요한 파트너"라면서 "그(캠벨)가 그들(중국)에게 이 과정을 진전시키기 위한 그들(중국)의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오는 24일 미국 방문 계획을 확인하면서 "북한 문제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동아시아 정상회담 등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그는 이어 북한의 최근 한국에 대한 위협 행위 때문에 대북식량지원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면서 "식량 지원은 정치적인 것과는 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 토너 부대변인은 또 북한과 중국이 최근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와 나선 경제무역지대의 착공식을 개최하는 등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은 채 "우리는 북한과의 거래에서 투명성과 극도의 조심성, 경계를 촉구 한다"고 밝혔다.
- 그는 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핵무기 개발, 사치품 획득 등을 겨냥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을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촉구했다.

나. 미·북 관계

● 게이츠 "美, 北 불안정하게 만들 생각 없다"(6/6)

-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은 북한의 정권교체에 관심이 없으며, 북한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데도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가



5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게이츠 장관은 지난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인 '상그릴라 대화'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 그는 "북한이 모든 다른 국가들이 준수하는 똑같은 국제 룰을 준수하도록 6자회담 관련국들이 만들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되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 잠재적인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가능성 및 계속되고 있는 핵무기 개발로 북한은 미국에 직접 위협이 되는 과정에 있다"고 거듭 밝혔다.
- 그는 이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 등을 거론하면서 "우리의 우려 중 하나는 또 다른 도발이 있을 경우 (발생할) 예측할 수 없는 긴장 고조 위협"이라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더욱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같은 말을 두 번 하는데 지쳤다"는 자신의 이전 언급을 되풀이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 이와 함께 그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북한의 도발이 "후계세습과 연계된 것이 아니기를 기대한다"면서 남북 간에 평화적인 방안으로 확산 문제를 포함한 이슈들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는 북한의 또 다른 도발에 대한 한국 내 여론이 관대함을 잃어가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는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더욱 큰 위협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 게이츠 장관은 이 밖에 일본, 한국, 호주 등 동맹국과의 부담 공유 문제를 묻는 질문에 "부담이 공유돼야 한다는 것은 동맹 개념의 핵심"이라면서 "미국 국민이 미군의 전진배치 비용을 모두 질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 한편 녹취록 전문 서비스사인 FNS가 5일 제공한 녹취록에 따르면 게이츠 장관은 지난 2일 미국 공영라디오방송 NPR과의 인터뷰에서 "이란과 북한은 모두 핵무기들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이미 그것(핵무기)들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게이츠 장관은 지난해 11월 볼리비아 방문 시에도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진행해 왔으며, 핵무기들을 보유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한 바 있음.
- 미국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미 당국자들은 공·사석에서 북한의 실질적인 핵능력과 관련,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언급을 종종 내놓고 있음.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지난해 북한을 '핵무기들을 갖고 있는 곳'으로 분류하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했음.

● 북한의 대미수출 1위 품목은 '기념우표'(6/7)

- 미국의 대북제재 속에 2000년대 들어 북한의 대미수출 1위 품목은 기념우표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 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를 인용해 2000년부터 2010년 사이 미국에 수입된 북한산 제품이 33만5천 달러(한화 3억6천만 원) 규모에 불과했고 그 중 절반이 우표였다고 7일 보도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지난해 미국에



수입된 유일한 북한산 제품이 기념우표로 8천300달러 어치였다고 전했다.

- RFA가 전한 CRS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표를 제외한 북한의 대미수출품목은 여성용 의류 정도에 그쳤음. 보고서는 지난 4월까지 북한과 경제협력에 나선 중국기업이 86개인데 이들 기업이 북한에서 생산한 부품과 원자재 등이 중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으로 수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대북사업에 나선 중국 기업 중에는 광업회사가 35개, 산업부품과 원자재 회사가 17개, 농업 및 벌목회사가 11개 등이었음. 현재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은 미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대미수출이 가능함.

● 美 "대북 지원식량 전용 가능성 여전히 우려"(6/8)

- 미국 국무부는 7일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이 이뤄질 경우 이 식량이 필요한 곳이 아닌 군부 등 다른 곳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 "우리의 우려 중 하나는 지원식량이 전용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이와 관련, 그는 "(북한의 식량사정) 평가가 식량지원 여부를 결정할 한 측면이며, 또 다른 측면은 최종용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보하느냐 여부"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식량을 지원할 경우) 그것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확실히 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식량을 지원할 경우 어떤 종류를 지원할지도 함께 결정돼야 할 시안이라고 전했다.
- 토너 부대변인은 이어 북한을 방문했던 미국의 평가조사팀이 귀국했다면서 아직 식량지원 여부와 관련한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평가팀은 (방북) 결과를 평가할 것이며, 결정을 내리기 전에 파트너들과도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식량평가팀에 앞서 지난달 말 귀국한 킹 특사는 방북 시 북한 측과 지원식량 모니터링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나, 북한 측이 예상보다 강한 입장을 보이면서 모니터링 강화 문제에 대해 뚜렷한 합의를 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 美하원도 대북제재 강화법안 추진(6/8)

-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에도 제출됐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인 일리아나 로스-레티넨(공화, 플로리다) 의원과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캘리포니아) 의원은 지난 3일 북한, 이란,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 개혁 및 현대화 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북한과 관련된 제재 대상과 조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법안은 이들 3개국에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품은 물론 재래식 군사 물품이나 기술을 제공하거나 판매한 기관·업체도 제재하도록 규정했음. 또 이



들 기관, 업체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 금융시스템 접근을 금지시키도록 요구하고 있음.

- 이와 함께 북한 등 3개국에 전년도 입항했던 선박은 미국 항구 입항을 거부토록 했고, 이들 3개국 선박이 정박한 항구에서 미국으로 오는 선박에 대해서는 검색을 강화하도록 했음. 아울러 북한, 이란, 시리아 내에서 채굴된 광물을 구입하는 자들에 대한 정보를 미 행정부가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음.
- 레티넨 의원은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 개혁 및 현대화 법안은 불량 국가들이 다른 불량국가나 극단주의 그룹에 위험한 물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기존의 법을 더 강화해 줄 것"이라고 밝혔음.

● "킹 美특사, 北과 재미동포 이산상봉 논의"(6/8)

- 로버트 킹 미국 대북인권특사가 지난달 방북했을 때 북한과 재미동포의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논의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보도했음. RFA는 미국 국무부 고위관료의 언급을 인용해 "킹 특사가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을 비롯한 북한 당국자에게 인권 개선을 촉구했으며 여기에 이산가족과 관련한 문제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 이 관료는 "미국에 사는 한인 이산가족이 북한의 가족을 만나도록 미국 정부가 여러 노력을 하고 있으며 킹 특사의 주요 업무에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포함 된다"고 말했다.
- RFA는 "미국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면서 북한과의 인권관련 대화 범위를 확대할 수 있지만 한국을 따돌리고 미국과 대화하려는 북한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전했다.

● 美 "北, 자제해야"(6/9)

- 미국 국무부는 8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보도와 관련,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는 않은 채 북한의 자제를 촉구했음.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보도와 관련, "우리는 보도 내용을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한반도)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음. 그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종류의 시험들을 예전에 보았다"면서 "북한이 자제를 하도록 우리는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北태권도시범단 美서 인공기 걸고 공연 개시 (6/12)

- 미국을 방문한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11일(현지시각) 미국 보스턴 인근 지역에서 태권도 시범공연을 개최, 1주일간의 미국 공연 일정에 돌입했음. 미국을 방문 중인 북한 태권도 시범단(단장 배능만)은 이날 저녁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인근의 로웰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700여 명의 관중이 모인 가운데 첫 공연을 가졌음.
- 시범단은 2시간여 동안 진행된 공연에서 태권도의 기본 동작과 품새, 송



- 판·벽돌 격파, 격투기, 호신술 시범 등을 선보였음. 시범단의 이날 공연에는 특히 인근 지역의 한인 동포들은 물론 어린이들을 비롯한 현지 주민들이 몰려들어 대형 체육관을 가득 메우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음.
- 이날 공연에서 관중들은 격렬한 격투기와 격파 시범이 이어질 때마다 큰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시범단을 응원했고 공연이 끝난 뒤에는 관중들이 태권도 선수들과 기념사진을 찍거나 사인을 받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음. 특히 이날 공연이 진행된 체육관 한쪽에는 대형 인공기가 내걸렸고 시범단은 공연을 마친 뒤 기념사진을 찍을 때도 인공기를 들고 나와 눈길을 끌었음.
 - 태권도 시범단의 리순금 선수는 공연을 마친 뒤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공연할 수 있게 돼 조선 태권도의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 지난 9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시범단은 이날 공연에 이어 12일 뉴욕, 14일 펜실베이니아주 델리웨어 밸리 등에서도 공연을 한 뒤 오는 16일 시카고와 베이징을 경유해 평양으로 귀국할 예정임.
 - 특히 이번 북한 태권도 시범단의 방미는 최근 로버트 킹 미국 대북인권특사가 북한을 방문하는 등 그동안 경색됐던 북·미 관계가 개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태권도'를 통해 북·미간 해빙무드가 조성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음.
 - 북한 태권도 시범단의 배능만 단장은 공연 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오늘 공연을 보고 관중들이 모두 좋아하면서 우리 선수들과 같이 호흡을 맞추니 내 마음도 좋다. 앞으로 우리 조선과 미국의 체육인들이 교류를 더 많이 해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그는 이어 "우리 태권도 시범단이 2007년 미국 방문에 이어 오늘 또다시 정통 태권도의 기질과 위력을 보여줄 기회를 가지게 돼 기쁘게 생각 한다"면서 "이번 시범 출연 역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두 나라 태권도인과 무도인들 사이 친선의 유대를 강화하는데 적극 기여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음.

● 北 "북·미 관계 개선 기대"(6/12)

- 경색국면을 보이던 북·미 관계가 개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북한 태권도 시범단의 방미 공연을 동행중인 북측 관계자가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음.
- 북·미간 '뉴욕채널'로 불리는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한 관계자는 11일(현지시간) 북한 태권도 시범단의 첫 시범공연이 열린 미국 매사추세츠주 로웰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이번 태권도 공연으로 북·미 관계가 좋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그는 북·미 관계 개선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정치를 떠나 이런 문화·체육 교류를 통해 인민들끼리 가슴과 가슴이 맞닿게 되면 (두 나라 관계에)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대답했음. 이 관계자는 이어 "두 나라 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두 나라 사이에 다시 어려운 시기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음.



- 북한 태권도 시범단을 초청한 정우진 태권도 타임스 발행인은 "이런 체육 분야의 교류를 통해 양국 관계가 개선된다면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다. 중·북 관계

● 北노동당 "북중 관계 代이어 강화"(6/6)

- 북한 노동당은 6일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북중 관계를 대를 이어 강화하기로 결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중앙통신은 "정치국 회의는 두 나라(북중) 영도자 사이에 합의된 문제들을 각 분야에 걸쳐 원만히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할 데 대해 지적했다"며 "조중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50돌이 되는 올해에 조중친선의 특수성을 다시 한 번 힘 있게 과시할 데 대해 강조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정치국 회의는 김정일 동지의 이번 중국 방문 결과에 열렬한 찬동을 표시하고 앞으로 조중친선을 대를 이어 전면적으로 강화 발전시킬 데 대한 결의를 표명했다"고 소개했다.
- 2000년 이후 김정일 위원장의 일곱 차례 방중 이후 노동당이 회의를 열어 방중 결과를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이는 작년 9·28당대표자회 이후 노동당의 정치적 역할이 정상화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을 낳고 있음. 특히 '대를 이은 북중 친선'을 강조함으로써 후계자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까지 양국 관계를 공고히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임.
- 이날 회의에서는 "김정일 동지의 이번 중국 방문이 매우 적절한 시기에 진행됐으며 훌륭한 결실을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회의에서는 또 홍석형 당 비서를 직무 조정을 이유로 해임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로 이동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 북·중 합작개발 황금평 대규모 착공식(6/8)

- 북한과 중국이 합작 개발하는 압록강의 섬 황금평이 8일 대규모 착공식을 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갔다. 북한 합영투자위원회와 중국 상무부가 지난해 12월 베이징에서 황금평·라선특구 합작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지 6개월 만임.
- 이날 이른 아침부터 중국의 공인들이 배치돼 행사장 접근을 철저히 차단한 가운데 오전 10시 30분 열린 착공식은 철조망을 사이에 둔 황금평의 북·중 중간지대에서 열려 40분간 계속됐다.
- 착공식에는 북한에서 북·중 경제협력을 주도하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노동당 행정부장과 리수영 합영투자위원장이, 중국에서는 천더밍(陳德銘) 상무부장이 참석했다. 또 양국 관료와 초청인사, 단둥과 황금평 현지 주민, 공사 인부 등 총 1천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열렸다.
- 착공식장 곳곳에 '조중 친선', '공동 개발' 등의 문구가 적힌 대형 애드벌룬 수십 개가 뜨고 착공식 2시간여 전부터 군악대 연주와 북한의 노래



'회파람' 등이 흘러나와 분위기를 고조시켰음. 착공식은 축포를 터뜨리고 평화를 상징하는 수백 마리의 비둘기를 날리면서 오전 11시 10분께 막을 내렸음.

- 북·중은 이번에 착공식과 함께 황금평 임대 조건 등을 명시한 합작개발 협약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음. 양국은 이날 행사를 '황금평·위화도 경제시대 조중 공동개발 공동관리대상 착공식'으로 명명, 황금평에 이어 위화도에 대한 공동 개발에도 나설 것임을 내비쳤음.

● 中, 라선 첫 자동차 여행 시작(6/9)

- 중국인들이 자기 자동차를 직접 몰고 국경을 넘어 북한 라선특구를 관광하는 상품이 9일 처음 시작됐음. 9일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에 따르면 지린성청년여행사가 모집한 관광단이 이날 오전 지린성 창춘시를 출발해 2박3일의 여행 일정을 시작했음.
- 24대의 차량에 나눠 탄 90여명의 관광객들은 이날 오전 7시 창춘을 출발해 오후 훈춘시와 북한의 국경인 취안허(圈河)통상구를 통해 국경을 넘었음.
- 지린성 당국은 이번 여행의 시작을 기념해 취안허통상구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음. 관광객들은 이날 오후 라선특구에 도착한 뒤 라진항, 라진만, 해인마을, 망해각(望海閣)등을 둘러보고 북한 어린이들의 공연도 관람할 예정임. 청년사업가, 여행사 대표 등이 포함된 관광단은 11일 오후 라선을 출발해 귀국길에 오를 계획임.
- 한편 이날은 중국의 창지투(長吉圖, 창춘-지린-두만강) 개방 선도구와 라선특구를 잇는 도로 보수공사 착공식이 열린 것으로 전해진 날이어서 북한과 중국의 협력 강화를 상징하는 첫 자동차 관광 개시일도 여기에 맞춰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옴.

● <北-中, 경협 속도전 속 '동상이몽'(6/9)>

- 8일 황금평 공동개발에 이어 9일 훈춘(琿春)-라진항 도로보수 공사 착공식이 열린 것으로 보이는 등 북한과 중국이 양국 경제협력의 고삐를 바짝 죄는 모습임. 이번에 황금평과 훈춘-라선 도로 보수공사 착공식을 동시다발적으로 치름으로써 북·중은 적어도 이들 지역 공동개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확인, 이런 부정적 시각을 해소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임.
-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황금평과 라선특구 공동개발을 둘러싼 북한과 중국의 접근에는 미묘한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는 분석임.
- 우선 북한은 황금평과 라선특구 개발을 피폐해진 경제 재건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의도로 보임. 라선과 황금평을 각각 동해와 서해의 성장 거점으로 삼아 주변 지역에 경제적 파급 효과를 넓혀나가겠다는 전략임. '강성대국 원년'으로 삼은 2012년이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이렇다 할 성과물이 없는 북한으로서는 조급한 상황임.
- 중국을 끌어들이어 황금평과 라선특구를 개발, 북한식 표현인 '천지개벽'의



성과물로 삼고 더 나아가 이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부상한 김정은의 치적으로 돌림으로써 그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게 북한의 의도라고 대북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 최근 들어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례적으로 황금평과 라선특구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됨. 이런 점에서 북한은 라선특구와 황금평을 동시에 개발하기를 원하고 있음.

- 중국의 사정은 조금 다름. 중국 역시 라선특구 공동개발에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두만강 유역인 '창지투(長吉圖, 창춘-지린-두만강) 개방 선 도구'를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중국은 라진항을 통한 동해 항로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고 더 나아가 창지투와 라선특구를 잇는 국제적인 무역지대 건설도 구상하고 있음. 훈춘-라진 도로 보수공사에 중국이 더 적극적인 이유도 이 때문임.
- 반면 황금평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음. 마지못해 북한의 요구에 끌려 가는 듯한 모습이라는 지적도 있음. 물론 노후 공업지역인 라오닝 일대를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키려는 라오닝연해경제벨트와 연결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는 있겠지만 압록강 일대에 개발 여력이 있는 값싼 토지와 저렴한 노동력이 풍부한 중국으로서는 황금평 개발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분석임.
- 황금평과 맞닿아 있는 단둥시만 적극적일 뿐 라오닝성이나 중국의 중앙정부 모두 황금평 개발에 소극적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음. 중국의 일부 국영기업들이 이미 라선특구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반면 아직껏 황금평에 투자를 결정했다는 중국 기업 이름은 거론되지 않고 있음.
- 애초 지난달 말 예정됐던 황금평과 훈춘-라진 도로 보수공사가 갑작스럽게 취소된 것도 라선을 먼저 개발하고 황금평 개발은 뒤로 미루자는 중국의 요구에 북한이 반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음.
- 황금평과 라선특구 개발 방식에서도 북한은 속도를 낼 수 있는 중국 정부의 직접적인 투자를 원하지만 중국은 시장 원리에 맡기겠다고 전적으로 민간 개발 방식을 고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의 의도대로라면 북·중 물류 거점으로 떠오른 라선특구 개발에는 중국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겠지만 아직은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황금평의 본격적인 개발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 무엇보다 중국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일관된 정책을 펴는 등 북한 당국이 시장의 신뢰를 얻는 행보가 필요하며, 따라서 라선특구와 황금평 개발 성공의 열쇠는 다름 아닌 북한에 있다는 지적임.

● "훈춘-라선 도로 보수공사 착공식 열려"(6/10)

-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 벨트를 잇는 간선도로 역할을 하게 될 연변(延邊) 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북한 라진항 구간 도로 보수공사 등의 착공식이 9일 라선에서 열렸다고 행사에 참석했던 연변의 소식통들이 전했다.
- 소식통들은 "착공식은 북한의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과 중국의 천더밍(陳德銘) 상무부장이 주관한 가운데 라선의 한 호텔에서 열렸으며 북·중



- 인사 200여 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참석이 거론됐던 왕치산 중국 부총리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이들은 "행사는 점심을 겸해 2시간 가까이 계속됐으며 훈춘-라진항 도로 보수 공사와 중국이 투자한 시멘트공장 등의 착공식이 함께 열렸다"며 "그러나 8일 대규모 인원이 동원됐던 황금평처럼 공사 현장에서 의식이 치러진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 중국은 2008년 라진항 부두 사용권을 확보하면서 훈춘-라진 간 도로 정비를 약속했으며 북·중 양측은 지난해 12월 황금평과 라선특구 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음. 중국은 두만강 유역 경제벨트인 '창지투(長吉圖, 창춘-지린-두만강) 개방 선도구'를 건설하고 훈춘-라진을 연결고리로 삼아 라선특구도 북한과 공동개발, 이 일대를 국제적인 물류 거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임.
 - 훈춘-라진 구간은 53km에 불과하지만 비포장인데다 굴곡이 심해 물자 대량 운송의 걸림돌로 지적돼왔음. 중국은 올 연말까지 이 구간 도로 보수 공사를 마무리한 뒤 내년부터 라진항 뱃길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임.
 - 황금평이 착공식을 한 데 이어 훈춘-라진 도로 보수공사도 본격화되면서 황금평과 라선특구를 큰 축으로 하는 북·중 경협 벨트 조성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임.
 -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후 8일과 9일 각각 황금평과 라선특구 공동개발 관련 착공식이 열렸다고 확인했음.
- **"北, 신의주특구 행정장관 중국인 희망"(6/10)**
- 북한이 2002년 시도했다 실패한 신의주경제특구를 다시 추진 중이며 초대 행정장관으로 중국 기업인을 임명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음. 경제관찰보는 9일 단둥 소식통을 인용해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최근 단둥을 비밀리에 방문해 홍콩의 다국적 투자회사인 신형지(新恒基)그룹의 가오징더(高敬德, 55) 이사장을 만났다고 보도했음.
 - 압록강 섬인 황금평 개발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신형지그룹은 주로 중국 본토에 투자를 하는 종합 투자회사로 총자산이 600억 홍콩달러에 달함. 쓰촨성 출신인 가오 이사장은 중국의 최고 국정자문 기관인 중국정치협상회의 위원을 맡고 있으며 홍콩에서도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입법위원(1·2대)을 지낸 중량급 인사임.
 - 김영남 위원장은 가오 이사장을 만나 신의주 발전과 북한의 경제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전해졌음. 경제관찰보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신형지그룹을 매우 중요시하면서 가오징더 이사장을 여러 차례 초청했다"며 "북한은 가오징더가 신의주특구의 행정장관을 맡기를 희망하고 있고 이미 중국 고위층으로부터 동의도 얻었다"고 전했다.
- **〈中신화, 북한관광 상세 소개 눈길〉(6/10)**
-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10일 중국인의 북한 관광 경험담을 상세하게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음. 신화통신은 지난 9일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서



출발해 훈춘시와 북한의 국경인 취안허(圈河) 통상구를 통과해 북한의 라선 특구로 들어가는 관광 상품이 처음 출시된 것을 계기로 관광객들의 소감을 중심으로 북한 관광의 실상을 전했다.

- 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사정이 1960년대 중국을 연상시킬 정도로 낙후돼 있지만 6·25 전쟁을 겪은 노년 세대에게는 '향수'를 느끼게 해 북한을 찾는 중국인이 꽤 많다고 함. 통신은 북한을 찾는 중국인의 연령층은 대부분 50대 이상이고 10년 전 북한 관광이 가능해지면서 매년 1만~3만 명의 중국인이 북한을 찾는다고 전했다. 유럽 관광객은 연간 1천명, 일본 관광객은 500명 수준임.
- 통신은 이어 자동차를 직접 몰고 가는 북한 관광상품까지 생겨 앞으로 중국인의 북한 관광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음. 통신은 지린성청년여행사가 모집한 90여명의 북한 관광단이 9일 오전 지린성 창춘을 출발해 훈춘시, 취안허 통상구를 거쳐 라선특구로 향했다고 소개했음. 통신은 중국인의 북한관광은 4~6일 일정으로 이뤄지며 비용은 4천 위안(66만6천 원) 수준이라고 전했다.

● 北·中 평양서 전략대화(6/10)

- 북한 노동당과 중국 공산당은 10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전략대화'를 갖고 양국 친선협조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전했다. 중앙통신은 "대화에서 쌍방은 자기 당 활동정형을 통보하고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 시킬데 대해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논의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음.
- 북한이 다른 나라와 '전략대화'라는 명칭의 회담을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어서 주목됨. 최근 북중 양측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이후 황금평·위화도 특구와 나선 특구 착공식을 하는 등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날 대화에서는 정치·경제·외교 등 여러 방면에서 협조강화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임.
- 이날 대화에는 북측에서 최태복 당비서와 리영수 당 부장이 참석했음. 중국측에서는 이날 방북한 리위안차오(李源朝) 공산당 조직부장, 왕자루이(王家瑞) 대외연락부장, 쑨정차이(孫政才) 지린성 당서기, 판리강(潘立剛) 당중앙 조직국장, 리시(李希) 상하이시 당위원회 조직부장, 스타이핑(石泰峰) 장쑤성 당위원회 조직부장, 양이앤이(楊燕怡) 당중앙 대외연락부장 조리 등이 참석했음.
- 중국 공산당 조직부장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2001년 3월 쟡창홍(曾慶紅) 조직부장 이후 10년여만의 일임.

라. 일·북 관계

● 北 "日 과거청산하고 백배천배 배상해야"(6/8)

-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이 8일 나란히



- 과거사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며 일본을 압박했음.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이날 '일본은 하루빨리 과거청산에 나서야 한다'는 개인필명의 논설에서 "일본의 과거범죄는 세대가 수십, 수백 번 바뀌어도 절대로 지워버릴 수 없는 특대형 반인륜적 죄악"이라며 "우리 인민은 일본의 과거죄악의 대가를 반드시 천백배로 받아내고야 말 것"이라고 밝혔음.
- 신문은 "오늘 국제사회에는 과거의 잘못에 대해 성근하게(성실하게) 반성하고 사죄, 배상함으로써 죄 많은 과거와 결별하려는 움직임이 적극화되고 있다"며 "일본은 우리 인민의 반일감정과 의지를 똑바로 보고 하루빨리 과거청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음.
 - 민주조선도 '반드시 결산돼야 할 일본의 인권유린범죄'라는 개인필명의 글을 통해 "지난 세기 일제가 수많은 조선 사람을 강제연행, 납치해 노예노동을 강요하고 학살한 그 포악성과 야만성은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사실이 이러함에도 일본은 과거범죄에 대해 사죄와 배상의 책임을 계속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음.
 - 이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백년속적 일제의 죄악의 역사를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며 그 피값을 백배, 천배로 기어이 받아내고야 말 것"이라고 했음.

● "日, 北에 9월까지 일본인 납북 재조사 요구"(6/11)

-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10일 오전 납치문제 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북한에 '9월까지 납치(일본인 납북) 피해자 재조사를 요구하라고 지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음.
- 간 총리는 "주권의 문제, 사람의 생명에 관련된 문제인 만큼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북한이 재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대북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 총리는 이밖에 북한과의 대화 환경 정비, 국제적인 연계 강화, 정보 수집과 분석 강화 등도 지시했음.
-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납치 피해자 재조사나 추가 제재 검토 등을 담은 8가지 항목의 '대처 방침'을 정했지만, 북한은 재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음. 간 총리는 "눈에 보이는 진전이 없다는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음.

마. 기 타

● "WFP 5월 대북식량지원 규모 오히려 줄어"(6/7)

- 지난 4월 말 대북 긴급지원 계획을 밝힌 세계식량계획(WFP)의 5월 대북식량지원 규모가 곡물 확보 지연으로 당초 계획의 5% 수준에 머물렀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WFP가 5월에 북한 주민에게 지원한 식량은 1천600t으로 새로운 긴급지원 사업 계획상 한 달 지원량인 3만2천800t의 5% 수준임. 이는 긴급지원 계획을 밝히기 이전인 4월의 2천300t보다도 적은 양임.
- WFP는 긴급지원 계획 발표 당시 5~7월 춘궁기에 어린이와 임산부,



노인 등 350만 명에게 식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5월 한 달간 WFP 지원의 혜택을 본 북한 주민은 112만 명에 불과함. 이 같은 식량 지원량 감소는 곡물 확보가 늦어졌기 때문으로 보임.

- 나나 스카우 WFP 북한담당 대변인은 "4월 말에 발표한 대북 긴급지원 사업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금을 새로운 지원사업 비용으로 전환하고 곡물을 구입하는 데 두 달 가량 걸린다"며 "7월 초가 돼야 북한에 곡물을 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음. WFP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니세프(UNICEF) 등은 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북한의 9개도, 40개군을 방문해 실태조사를 벌인 뒤 600만 명이 식량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WFP는 이 보고서를 근거로 긴급식량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음.

● "북, 지난주 서해로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6/8)

- 북한이 지난주 서해상으로 KN-06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음. 정보당국의 한 소식통은 8일 "북한이 지난주 중반 평안북도 서해안에서 KN-06 단거리 미사일을 한 차례 발사했다"면서 "현재 개량 중인 KN-06 미사일을 시험한 것으로 분석 된다"고 밝혔음.
- 북한은 최대 사거리 120km의 KN-01/02 지대지 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리고 정확도를 높인 KN-06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기 위해 작년부터 시험 발사하는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음.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2009년 10월 동해상으로 5발의 KN-02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한 지 1년 7개월여 만임.
- 소식통은 "이번 발사는 단거리 미사일을 개량하기 위한 시험 발사"라면서 "북한이 최근 남측 군부대가 김일성, 김정일 부자 사진을 표적으로 이용한 데 대해 군사적 보복을 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과는 무관한 것으로 분석 된다"고 말했음.

● 엘더스 "대북 긴급식량지원 촉구"(6/9)

- 전직 세계 원로들의 모임인 '디 엘더스'는 북한에 대한 긴급 식량지원을 거듭 촉구했음. 엘더스는 지난 3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엘더스 대표단의 지난 4월 말 방북결과 보고서를 통해 국제사회에 이같이 호소했음.
- 엘더스는 또 국제사회에 남북대화 와 6자회담 재개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유엔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을 포함한 유엔 인권이사회 대북결의안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음.
- 카터는 이번 보고서에서 "남북관계를 볼 때, 안보 및 핵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없다"면서 "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모든 당사자 간에 보다 큰 유연성, 진정성 및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음.
- 엘더스는 보고서에서 세계식량계획(WFP) 등의 북한 식량사정 평가 보고서가 "철저하고 신뢰할 수 있다"면서 "북한 전체 어린이 중 3분의 1이 성장이 저해된 상태이며, 5분의 1은 저체중이고, 수유모의 4분의 1은



영양 결핍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음.

● '검색표적' 北선박 공해상 떠돌다 결국 회항(6/12)

- 지난달 하순 동남아로 향하던 북한 선박이 공해상에서 장기간 표류하다 결국 기항하지 못하고 북한으로 되돌아가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 선박은 의심 물자를 실은 혐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에 따른 검색의 집중대상이 되면서 결국 기항을 포기하고 회항한 것으로 전해졌음.
- 북수의 정부 소식통은 "의심스러운 물자를 실은 배가 항구에 기항할 경우 해당국 정부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라 검색 등 적절한 행동을 취하게 돼 있다"면서 "문제의 선박은 기항지를 찾지 못하고 공해상에서 계속 표류하다 관련국들이 검색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부담을 느껴 되돌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음.
-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우리 정부가 동남아지역의 관련국들에 유엔 결의에 따라 자국 영해에서의 검색을 요청했으며 각국은 이에 적극 적으로 협조했다"면서 "북한의 확산의심 물자나 군수물자 수출을 해상에서 원천봉쇄함으로써 대북 제재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셈"이라고 평가했음. 그러나 이 선박의 애초 목적지가 어디였는지, 적재하고 있던 화물은 무엇이었는지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음.
- 정부 소식통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조가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무기 수출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음. 유엔의 핵심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확한 통계수치는 없지만 국제 무기 거래 전문가들은 안보리 결의 이후 북한의 재래식 무기 수출량이 엄청나게 줄었으며, 보수적으로 본다"고 해도 최소한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음.
-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지난달 중순 발간한 보고서에서 "무기와 관련 부품들을 선박으로 수송할 경우 물리적 검색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북한은 전세기 편을 통한 수송을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며 '선박'보다는 '항공'을 이용한 북한의 무기 수출이 늘어나고 있을 개연성을 시사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국군 지휘 받아 한·미 전차 함께 훈련했다>(6/8)

- 8일 오전 9시경 경기도 파주시 육군 1군단 무건리훈련장 야산 너머로 전차의 굉음이 들리더니 K-1 전차들이 빠른 속도로 돌격해 개활지에 모습을 드러냈음. 시나리오가 없는 자유교전 훈련방식으로 종료 시간 역시 정해지지 않았음. 승패가 갈릴 때까지 황군과 청군의 치열한 공방



- 이 계속됐음.
- 한·미 전차부대가 처음으로 모여 진행된 합동훈련은 실전을 방불케 했음.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염두에 두고 한국군이 미군을 지휘한 첫 야전 전술훈련이어서 눈길을 끌었음.
 - 이날 육군 1군단 2기갑여단 2개 전차대대와 미2사단 기계화보병 2개 중대가 참여해 황군과 청군으로 나뉘 교전했음. 훈련에 참가하는 장병은 모두 마일즈(다중통합레이저교전체제) 장비를 소지하고 전차에도 미군이 사용하는 전차용 마일즈 장비가 부착돼 서바이벌 게임처럼 피격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했음.
 - 7일 시작된 이번 연합훈련은 10일까지 4일간 무건리훈련장과 다그마노스 훈련장에서 실시됨. 한국군은 이번 훈련에 K-1 전차 40대와 K-200, K-242 장갑차 각각 4대, K-277 장갑차 3대, 자주 대공포 비호 2문, 구난전차 8대를 비롯한 병력 515명으로 참가했으며 미군은 브래들리 장갑차 28대와 구난전차 4대, 일반차량 20대, 병력 320명이 참여했음.
 - 이 연합훈련은 1군단과 미2사단 합의에 따라 지속적으로 실시될 예정임.

● 한덕수, 美에 韓·美 FTA 조속 비준 촉구(6/10)

- 한덕수 주미 대사가 9일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늦출 경우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조속한 FTA 비준을 촉구했음.
-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한덕수 대사는 이날 아이오와 주도 디모인에서 열린 세계양돈박람회(WPE)에 참석, 연설을 통해 FTA가 미 의회의 여름 휴회 이전까지 비준되지 않을 경우 의원들의 바쁜 일정과 내년 대선 등을 감안하면 통과 가능성은 현격히 낮아질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음.
- 한 대사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 있지만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서 협정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미국 양돈업계에 더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냉동 돈육이 한국에 수출될 때는 25%의 관세를, 생고기나 냉장 돈육이 수출될 때는 22.5%의 관세를 물어야 함. FTA가 체결되면 미국은 2016년까지 냉동 돈육 전부와 일부 가공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게 됨.
- 한 대사는 한국이 유럽연합(EU)과 체결한 FTA가 내달 1일 발효된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한·미 FTA가 비준되지 않으면 미국 양돈업계는 한국시장에서의 우세한 지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말했음. 그는 미국 농축산업계가 한·미 FTA로 그 어떤 업종보다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서 한국은 가축사료용 농작물을 키울 경작지가 부족해 식품과 농산품을 수입해야 할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미국 수출업자들은 올해 1분기 아시아에 구제역 파동이 일면서 한국에 돼지고기 수출량이 3배나 증가했음.



● 美재무부 테러담당 차관대행 재정부 방문(6/10)

- 미국 재무부의 데이비드 코언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 대행이 10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이란 관련 문제를 협의했음.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코언 차관 대행이 재정부를 방문해 최종구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 등 국제금융당국자들과 이란 문제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그는 지난해 한국 정부가 이란 제재에 협력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음.
- 코언 차관 대행은 재정부에 이란이 불법적인 핵무기 프로그램에 국제금융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막으려면 국제 제재를 강화해야 하며 한국 정부도 이런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러나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코언 차관 대행과 이란 문제를 논의한 것은 맞지만, 우리 정부에 제재 강화를 요구했는지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음. 이 관계자는 코언 차관대행과 대북 금융제재 문제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음.

나. 한·중 관계

● 국방부 "김관진 장관 7월초 중국 방문"(6/6)

- 김관진 국방장관이 7월 초 중국을 방문한다고 국방부가 6일 밝혔음.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김 장관이 지난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0차 아시아안보대화(상그릴라대화)에 참석한 결과를 설명한 자리에서 그 같이 밝힌 뒤 "김 장관의 중국 방문은 천안함 사건 이후 처음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음.
- 김 장관의 방중 때 양국은 해군 간 수색구조훈련(SAREX) 조기 실시 방안과 해·공군 직통전화 운용 평가 등을 비롯한 한반도 안보 정세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됨. 김 장관과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장관)은 아시아안보대화에서 양자 대담을 하고 "김 장관의 중국 방문 때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당시 대담에서 량 부장은 "올해 초부터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고 북한의 비핵화는 양국의 공동이익"이라고 평가했음.

● 한·중 외교, '김정일 방중' 의견 교환(6/6)

- 헝가리를 방문 중인 김성환 외교통상장관은 6일(현지시각)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여간簾>)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지난 5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 등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음.
- 제10차 ASEM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이곳에 온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부다페스트 시내 한 호텔에서 양 부장과 만나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음. 두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한반도 정세와 관련, 지난 5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결과 및 최근 남북관계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음.



- 김 장관은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최근 북측의 강경 입장 표명에도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설명하면서 양국 간 긴밀한 협의를 위한 중국 측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음. 이에 대해 양 부장은 우리 정부의 남북대화 추진 노력을 평가하고, 한반도 평화 안정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양국의 긴밀한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 외교부 한 관계자는 "양 부장은 지난 5월 김 국방위원장의 방중과 관련해 중국의 경제개발과 개혁개방을 참고로 삼으라는 취지로 김 국방위원장을 초청했다는 기존의 설명과 같은 맥락에서 말했다"고 전했다.
- 중국 측은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을 초청한다는 의사를 재차 전달하고 우리 측이 초청한 리커창(李克強) 부총리 등 중국 고위 인사들의 연내 방한 추진 문제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오는 7월 ARF 외교장관회를 계기로 양국 외교장관회담을 갖기로 했음.

● 中 상하이 임정청사 운명 다시 기로에(6/9)

- 대한민국의 오늘을 잉태한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가 상하이시 행정구역 개편으로 다시 준립의 기로에 서게 됐다. 9일 상하이총영사관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최근 상하이 임정청사가 소재한 루완(盧灣)구를 황푸(黃浦)구로 흡수 합병시켜 신황푸(新黃浦)구로 만드는 방안을 허가했다는 것임.
- 이는 루완구의 모든 인력과 조직체제가 황푸구 중심으로 변화하고 루완구 문물로 지정돼 보호를 받아왔던 임정청사가 문물로 지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작년 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빈민가에서 변화가로 변모하고 있는 황푸구는 지역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모습이어서 임정청사에 대해 큰 비중을 두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특히 임정청사는 주변 2만㎡의 부지가 조만간 대규모 개발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현재 상태로 보존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낡은 건물들이 밀집해 있는 임정청사 주변은 와이탄(外灘)과 신텐디(新天地), 난징동루(南京東路), 화이하이중루(淮海中路) 등 인근의 핵심 상권과 크게 대조돼 개발이 시급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음. 임정청사 관리를 맡고 있는 상하이총영사관은 이에 따라 비상이 걸렸음. 일단 루완구를 합병하는 황푸구와 접촉해 임정청사를 신황푸구의 문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방침임.
-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루완구가 없어지더라도 한국과 중국의 외교 관계를 고려하면 임정청사가 문물로 보존될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개발에 중점을 두게 될 신황푸구 입장에서는 임정청사의 보존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거의 없기 때문임.
- 황푸구 관계자들은 최근 임정청사 문물지정과 관련해 접촉을 시도해온



총영사관측에 대해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주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총영사관 관계자는 "루완구 문물로 지정된 임정청사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황푸구로부터 루완구를 합병하더라도 임정청사를 문물로 계속 보존하겠다는 문서를 받아놔야 한다"면서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음.

● <北中경협 현장 훈춘서 '3국 협력' 한목소리>(6/9)

- 황금평과 훈춘(琿春)-나진에서 연달아 북중 경제협력 사업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남북경협 관계자들과 중국학자들이 훈춘 현지에서 대규모 학술회의를 열어 동북아의 발전방향을 모색했음.
- 9일 중국 지린(吉林)성 훈춘시 빈관에서 남북물류포럼 주최로 열린 '이제는 훈춘이다' 주제의 학술회의에 모인 참석자들은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 사업에 한국이 힘을 보태야 동북아 발전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음.
- 이날 행사에는 한국에서 외교장관을 지낸 공로명 동아시아재단이사장, 안충영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홍양호 전 통일부 차관,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장, 조정명 포스코건설 상무 등 각계의 남북문제 전문가들이 참석했음. 또 현동일·김강일·이종림 연변대 교수 등 현지의 학자들이 참석했고 중국 공산당, 훈춘 경제협력국 관계자, 길림신문 등 현지 언론이 이들의 발표와 토론에 귀를 기울였음.
- 전날 환영만찬에서는 정창권 훈춘시 부시장이 참석해 물류기지로서 훈춘의 발전 가능성을 강조하며 이 지역에 대한 한국의 높은 관심을 반겼음. 서종원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국의 두만강유역 개발은 중국내 균형개발을 위한 것으로 동북아 차원의 주도권 선점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한국이 두만강유역을 동북아경제공동체 구축, 평화정착을 위한 요충지로 활용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 이미 중국이 북한의 항만을 확보하는 등 훈춘시를 중심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 몽골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지만 중국으로 물자수송을 위해서는 한국 영해를 거쳐야 하는 등 북중 간 경협사업은 한국의 협력 없이는 한계가 있다는 뜻임. 오히려 한국이 이 지역에 투자하면 동북아 경제협력 조성의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서 부연구위원은 역설했음.
- 김강일 연변대 동북아연구원장도 "국제사회가 북핵을 우려하고 한국사회가 강경한 대북정책을 펴는 상황도 이해되지만 북한을 마냥 대립적으로 대하면 변화를 유도할 수 없다"며 "한국은 중국과 대화와 함께 두만강유역 개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현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음.
- 이 지역은 북중 고위관계자가 머무는 탓인지 공항 검색이 강화되는 등 경계가 삼엄한 분위기임. 전날 학술회의 참석자들이 연지(延吉)공항으로 입국할 때도 현지 당국은 행사주최 단체의 성격과 입국 목적, 참가자 면면, 학술회의 내용을 상세히 확인한 후에야 입국을 허용했음.



● 中 혼춘, 한국경제인 상대 투자설명회 일방취소(6/9)

- 중국 혼춘(琿春)시가 한국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설명회를 행사 전날 뚜렷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현지에 체류 중인 남북 경협 관계자들이 9일 전했다.
- 한국의 남북물류포럼 소속 경제인 등으로 구성된 남북경협 관계자 40여명은 '이제는 혼춘이다'란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8일 혼춘시에 도착했고 10일 오전 혼춘시 청사를 찾아 시정부로부터 물류기지로서 혼춘의 발전 가능성과 투자방법 등에 관해 설명을 들을 예정이었음.
- 전날 저녁까지만 해도 투자설명회 개최를 위해 구체적인 상황을 체크하던 혼춘시 관계자는 이날 오후 갑자기 태도를 바꿔 "그 행사(투자설명회)는 취소됐다"고 남북물류포럼 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했음.
- 약 3개월 전부터 투자설명회 참석을 준비해온 남북물류포럼 측이 취소 이유를 거듭 문의했으나 시정부는 별다른 언급 없이 "취소됐다"는 말만 반복하며 얼버무린 것으로 알려졌다.
- 전날 북중 경협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장성택 북한 노동당 행정부장과 천더밍(陳德鎰) 중국 상무부장이 황금평 경제특구 착공식을 마친 뒤 나선으로 가기 전 이곳에서 하루 머물렀던 터라 현지에서는 혼춘시의 이 같은 결례가 북한의 입김 때문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음.

다. 한·일 관계

● 여야 의원, 日 지진 현장 방문 후 간 총리 예방(6/6)

- 국회 아시아 문화·경제포럼 소속 여야 의원들이 일본 총리를 만나 일본 대지진 피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위로를 전했음. 포럼 대표인 한나라당 박진 의원과 민주당 김춘진 의원,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6일 오후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를 만나 지난달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의 '원자력 안전 및 재난관리 협력 강화' 방안을 구체화하는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음.
- 한편 박선영 의원은 이날 도쿄에서 열린 제47회 한일 협력위원회에서 "유럽 원자력공동체처럼 아시아 원자력 공동체를 설치하고, 중국·인도·파키스탄·북한 등도 가입시키자"고 제안했음. 한일 협력위원회는 남덕우 전 총리와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총리가 공동 회장을 맡고 있고, 아소 다로(麻生太郎) 전 총리가 차기 회장 대리를 맡고 있음.

● 日 검찰, 韓 여성 토막살해범 판결 항소 포기(6/9)

- 한국 여성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한 일본인에게 일본 법원이 '살해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하자 일본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조만간 형이 확정될 전망이다.
- 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시카와(石川)현 가나자와(金澤) 지검은 이날



- 살인과 시체손상·유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8년이 구형됐지만 상해치사죄로 징역 9년이 선고된 이누마 세이이치(飯沼精一, 61, 무직) 피고인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음. 이누마씨의 변호인도 항소를 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조만간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나자와 지검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인이 확실하지 않다"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재판 과정을 지켜본 대한변협 진상조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가나자와 지검에서 '항소하지 않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피해자의 유가족이 일본 검찰에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유가족은 같은 재판부에 손해배상명령을 신청한 상태임.
 - 이누마씨는 2009년 6월께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 안에서 한국 여성 강모(2009년 사망 당시 32세)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살해한 뒤 흉기로 머리를 잘라냈고, 시신을 트렁크에 넣어 산속에 버렸음. 이 트렁크는 지난해 3월29일 발견됐고, 이누마씨는 4월 1일 언론 보도에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고 경찰에 자수했음.
 - 하지만 가나자와 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지난달 27일 "시신을 해부한 의사의 증언으로는 (강씨의) 사인이 목을 조른 질식사였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와 시체손상·유기죄를 적용해 징역 9년을 선고했음.
 - 강씨의 오빠(40)는 1심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증거를 무시한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음.

● 한일도서협정 발효..日 "절차 완료" 통보(6/10)

- 한일도서협정이 체결된 지 약 7개월 만에 발효됨에 따라 조선왕실의궤 등 약탈 도서가 늦어도 12월10일까지는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음. 정부는 10일 "일본 정부가 오늘 오전 11시께 '협정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고 통보해왔다"며 "이로써 지난해 11월14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외교장관이 서명한 한일도서협정이 발효됐다"고 밝혔다.
- 한일도서협정 3조에는 '한일 양국 정부가 자국의 국회 비준 등 절차가 끝났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상대국 정부에 통보한다. 협정은 늦은 쪽의 통보가 수령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 한다'고 규정돼있음. 한국은 지난해 11월19일 국내 절차를 끝냈다고 일본 측에 통보했음.
- 일본 측이 지난달 27일 국회 비준을 받은 데 이어 이날 오전 내각회의를 거쳐 한국 측에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고 알림으로써 협정이 공식 발효됐음.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협정이 규정한 대로 '발효 후 6개월 이내인 오는 12월10일까지 조선왕실의궤 등 한반도에서 약탈해간 도서 1천 205권을 돌려줘야 함.



- 정부는 이날 외교통상부 대변인 논평을 내고 "한일도서협정이 발효한 것을 환영 한다"며 "앞으로 실제 도서 인수를 위한 양국 실무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돼 조선왕실의궤를 포함한 도서 반환이 조기에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라. 미·중 관계

● 美 캠프 방중..北문제 등 협의(6/7)

- 커트 캠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중국 외교 당국자들과 북한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6일 베이징을 방문했음. 캠프 차관보의 이번 방중은 북한의 일방적 남북대화 중단 선언으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기존의 '3단계 방안'의 틀이 흔들린 후 미국과 중국이 처음 만나 한반도 문제를 조율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됨.
-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캠프 차관보가 6일 방문해 추이텐카이(崔天凱) 외교부 부부장과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를 각각 만나 양국관계와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음.
- 캠프 차관보는 대미 외교를 담당하는 추이 부부장을 만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양자 문제와 북한, 이란 문제 등을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음. 특히 이들은 남중국해 분쟁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아시아태평양사무 협상' 개시와 관련한 구체적 논의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아울러 캠프 차관보는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 특별대표와의 회견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에 대한 사후 설명을 듣고 북한의 남북 비밀접촉 공개와 대화 중단 선언 이후 더욱 불투명해진 6자회담 재개 절차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됨.
- 이 자리에서 중국이 미국 측에 6자회담 참가국 사이에 공감대를 얻어온 '남북대화→북미대화→6자회담 재개'의 3단계 방안을 고수하며 북한에 대한 설득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을지, 아니면 첫 단추인 남북대화가 실현되기 어려워졌다는 현실적 판단 아래 이를 생략한 새 방안을 제시했을 지가 관심사임.
- 미국과 중국 사이의 논의 결과는 8~9일 중국을 방문하는 우리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게 우 특별대표를 통해 전달될 것으로 예상됨.

마. 미·일 관계

● 日 오키나와 아하시구, 후텐마 기지 이전지 자원(6/11)

- 미일 양국이 주민들의 반대로 오키나와(沖縄) 후텐마(普天間) 기지를 좀처럼 옮기지 못하는 가운데 오키나와 한 지역이 기지 이전지로 자원하고 나섰다"고 교도통신이 10일 보도했음. 통신에 따르면 오키나와현 구



- 니가미(國頭)촌 아하(安波)지구 주민들은 이날 밤 주민 총회를 열고 도로 건설 등을 조건으로 미군 기지를 수용하기로 했음. 투표 결과 125명 중 75명이 기지수용에 찬성했음.
- 구니가미촌은 오키나와섬의 최북단에 있으며 오키나와섬의 중심 도시인 나하(那覇)시에서는 북동쪽으로 95km가량 떨어져 있음. 지역 주민들이 내세운 조건은 오키나와도(道)를 구니가미촌까지 연장하는 등 지역진흥책을 시행하라는 것임. 아하지구에 있는 2천500m 길이의 민군(民軍) 공용 공항을 정비해 후텐마 미 공군 기지를 수용할 계획임. 주민들은 앞으로 일본 정부와 기지 이전 교섭을 벌일 방침임.
 - 하지만 미야기 가오루(宮城馨) 구니가미촌 촌장은 "(아하지구 주민들은 몰라도) 구니가미촌 전체적으로는 (기지 수용에) 반대한다"며 "후텐마 기지는 오키나와현 밖, 일본 밖으로 옮기길 원한다"고 밝혔음.
 - 미국과 일본은 후텐마 미군 기지를 나고(名護)시 헤노코(邊野古) 지구에 옮기기로 합의했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강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음. 칼 레빈 미 상원 군사위원장 등은 헤노코 이전 계획이 비현실적이라며 오키나와의 또 다른 기지인 가테나(嘉手納) 기지에 통합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라고 요구하고 있음.

바. 중·일 관계

● 日, 中 함정 오키나와 부근 통과에 '민감' 반응(6/9)

- 중국 군함이 동중국해 공해상을 통과한 데 대해 일본 방위성과 언론 매체가 큰 관심을 보였음. 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9일 중국 해군의 호위함(프리깃) 3척이 이날 오전 오키나와(沖繩)섬과 미야코지마(宮古島) 사이 공해상을 동중국해에서 태평양 쪽으로 지나갔다고 발표했다. 앞서 통합막료감부(합동참모본부)는 8일 중국 함정 8척이 같은 해역을 통과했다고 밝혔음.
- 일본 매체들은 이틀간 중국 군함 11척이 오키나와 부근 바다를 통과한 것을 두고 "사상 최대 규모"라고 민감해하고 있음. 중국 함정은 앞으로 태평양에서 훈련할 것으로 예상됨.
- 오리키 료이치(折木良一) 통합막료장(합참의장)은 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 해군의 활동이 활발해진 것은 사실"이라며 "관심이 크다. 필요에 따라 경계 감시를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